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인쇄/1998년 10월 7일

발행/1998년 10월 1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교류협력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42-7

5,500원

역슬의의총서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민족통일연구원·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워크숍(98.6.15~17)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 본 자료는 1998년 6월 15일~17일 서울에서 열린 민족 통일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 Friedrich-Ebert-Stiftung) 공동주최 한·독 워크숍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민족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차례 -

개 회 사 양영식(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양성철(국회 통일·외무·통상위원회 간사)

▣ 주제: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I. 동·서독 정당통합과 한반도 통일	1
Herr Karl-Ludwig Böttcher(브란덴부르크주 시협의회 사무총장)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15
II. 동·서독의 의회제도 통합과 한반도 통일	26
박형중(민족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Herr Steffen Reiche(브란덴부르크주 과학기술문화부장관)	
◆ 토 론	47
III.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행정체제 구축방안	66
김학성(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76

회의일정

개 회 사

민족통일연구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클라우스 폴리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님, 페터 마이어(Peter May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서울사무소장, 양성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제4회 정기 한·독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새정부의 출범이래 한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평화의 재상」(Friedenskanzler)이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Ostpolitik)과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브란트는 1960년대 중반이후 일기 시작한 구라파의 긴장완화의 흐름과 동·서독 접촉·왕래의 점진적 확대 추세 속에서 통일구호대신 평화제일주의를 지향하는 「동방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공산주의들에 대한 일방적 양보요」, 「나약한 유화정책」이라는 초기의 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당적 「선 평화 후통일정책」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20년간 꾸준히 초당적 「동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독은

라인강과 엘베강의 정치기적인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서독의 초당적 평화정책 추진은 새삼스럽게 우리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구호의 함성보다는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명제를 설정하고서 정치적 체제통일보다는 무력도발 불용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확대 등 3대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당면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은 그 정책구상과 시행면에서 독일 브란트의 대동독 정책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한·독 워크샵은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단계를 거치고 통일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할 중요한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5년 이래 저희 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네차례의 한·독워크샵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양국 전문가들을 통해 한·독 통일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분단극복과정의 정책적 고려사항과 교훈요소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매우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과제들을 도출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측의 입장에서는 독일통일의 전개과정과 통일이후의 새로운 Nation Building과정에서 확인되는 교훈요소들을 도출하게 됨으로서 한·독워크샵이 우리들에게 방안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매우 귀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독일측 인사들은 통일문제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폴러스 주한 독일 대사님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해박한 전문지식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직접 북한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이 워크숍에 참석해 주실 부란덴부르크 주정부 쉬테펜 라이헤(Steffen Reiche) 장관님은 통일 총선거 당시 동독지역에 사민당을 조직·출범하는데 핵심역할을 하였고 통일 독일의 민주화에 크게 공헌해 오신 정치가요, 행정가로서 잘 알려진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란덴부르크 시험의회 칼 루드비히 뵈처(Karl-Ludwig Böttcher) 사무총장님께서도 동·서독의 정당 및 행정통합의 전문가로서 귀한 말씀을 해주실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귀한시간을 내주셔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독일측 전문가들과 한국측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가 있기까지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민족통일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빈 면

<기조연설>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and Its Implication on Unification

Dr. Sung Chul Yang

Vice Chair,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Committee

A. Overall Assessment

1. The birth pains of a nine-month pregnancy could be incredible. Imagine how severe the birth pains could be for the opposition on becoming the ruling party after a 50-year struggle? As the previous ruling establishment has governed the country for the past 50 years with few exceptions and interruptions, resistance and reluctance to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still runs deep. At best, the old-guard establishment forces play spectator roles; at worst, they obstruct the new government every step of the way.
2. For the first time political stability in South Korean governance is rock solid. Recently, economists and pundits abroad have

tended to lump the Korean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with that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e.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he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Southeast Asia is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achieved considerable democratic governance while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still struggling with politically unstable situations. Above all, while Southeast Asia has potential or actual ethnic, communal and linguistic cleavages, South Korea enjoys social homogeneity, cultural unity and a strong sense of national cohesiveness.

3. South Korea economy is still fundamentally sound, safe and secure in overcoming the current IMF bailout crisis as well as political obstacles stemming from opposition gridlock.

B.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June 4th Election

If President Kim's electoral victory last December was the first popular mandate for him and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NCNP) to rescue the Nation on the brink of collapse from the IMF financial crisis, landslide victory of the June 4th local election is the second popular mandate for President Kim to speed up financial and chaebol restructuring, as well as overall government and political reforms.

C.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resident Kim's North Korean policy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n four accounts:

First, he will never use or abuse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issues for domestic political use.

Second, he will separate politics from non-political issues and concerns such as humanitarian aide, private business transactions,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and mutual contacts among separated families.

Third, as far as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interactions and transactions are concerne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hall be strictly observed and enforced. There will be no unilateral concessions.

Fourth, the format for contact and dialogue will be three tiered: 1) North-South bilateral talks be used for tackling the problem such as food or fertilizer aid to North Korea or resolving separated families issues which are inherently mutual concerns by revitalizing the 1991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2)

the four-party talks will deal with the peace and security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3) the six-party talks, which could include Russia and Japan in addition to China and the USA may deal with political stability and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In lieu of my own personal concluding remarks, twelve recommendations for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proposed by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re appropriate and worth noting here:

- ① maintenance of combined US and ROK deterrence and readiness;
- ② acknowledgment that like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seeks the gradual transformation and not the destruction or absorption of the North;
- ③ provision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the North in response to immediate needs, with a clear signal that longer term assistance will depend on Pyongyang's readiness to make structural economic changes, allow adequate monitoring, and address other humanitarian concerns;
- ④ a South Korea lead in negotiations with the North, based on closely coordinated US and ROK approaches to Pyongyang;
- ⑤ a series of initial steps, including easing of US sanctions, to

promote market principles an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change its policies;

- ⑥ a subsequent package deal of larger reciprocal measures that might induce the North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and reduce the military threat;
- ⑦ a readiness to withhold any expanded assistance to the North (beyond those areas already stipulated in existing agreements or appropriate for immediate humanitarian reasons) if Pyongyang rejects the opportunity for reconciliation and threat reduction;
- ⑧ a coordinated approach with Japan, and improved consultation with China and Russia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 ⑨ sustained high-level attention to the Korea problem within the administration;
- ⑩ adherence to the Agreed Framework and support for KEDO;
- ⑪ continued support for South Korea in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ncluding US funding for the IMF quota increases;
- ⑫ an articulation of long-term US objectives beyond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제 1 회의

- 주 제: 동·서독 정당통합과 한반도 통일
- 발 제: Herr Karl-Ludwig Böttcher
(브란덴부르크주 시험의회 사무총장)
손기웅 박사(민족통일연구원)
- 토론자: 손기웅 박사(민족통일연구원)
황병덕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서준원 박사(국회법제예산실)
Herr Karl-Ludwig Böttcher
김도태 박사(민족통일연구원)
김영탁 과장(통일부)

동·서독의 정당통합

Herr Karl-Ludwig Böttcher
(브란덴부르크주 시의회협의회 사무총장)

저는 통일 이전 동독에서 출생하여 현재 브란덴부르크주 시의회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며, 1990년에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동·서독의 정당통합과정을 통일전 동독의 상황,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특히 저는 독일이 정당통합과정에서 무엇을 잘 하였는가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수한 점은 무엇이었는가도 아울러 말씀드려 그것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정당통합을 준비하는데 시사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부가 조급한 통일을 배제하고, “햇볕론”이란 원칙하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데 저는 무척 공감합니다. 1989~1990년간 통일과정에서 당시 독일에는 상이한 두가지 입장이 존재하였습니다. 통일을 향한 유동적인 움직임이 적극화 되었을 때 통일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급행열차에 브레이크를 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진적인 통일론은 특히 당시 사민당(SPD) 수상후보 오스카 라퐁텐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때 독일이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였다면 통일 이후 독일이 맞았던 혹은 맞고 있는 문제점 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점입니다.

독일의 정당통합과 향후 남북한의 정당통합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유일당체제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1949년 건국 되었던 동독은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소련식 공산당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서독 분단 이전에 이미 독일이 역사적으로 민주적 정당체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동독에는 동독공산당(SED)을 중심으로 그 위성정당인 4개의 정당이 존재하였습니다. 위성정당들은 초기에는 민주적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SED의 형제정당화하여 SED의 지배에 유기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SED를 기피하는 동독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SED의 지배에 공헌하는 “틈새역할”을 한 것입니다. 동독사회의 안정에 기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로 향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

던 순간에 SED는 물론 위성정당들로부터 전환을 지향하는 어떠한 정치적 힘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통일 당시 SED는 230만명의 당원을, 위성정당들은 총 50만명의 당원을 가졌으며, 이들은 특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당원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전제조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대 동독내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성직자, 예술인들이 이러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1988년에는 SED내에서도 SED지배를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접어들어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결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당과 유사한 형태의 노이에스 포룸(Neues Forum: 새로운 광장)이 결성되었고, 저는 여기에 가담하였으나 정치적 이해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탈퇴하였습니다. 1989년 가을에 동독 SPD의 전신인 SDP가 창당되었으며, 저는 그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1956년까지 동독에 존재하다가 금지되었던 SPD의 후계정당으로서 SDP를 창당하였으나, 서독 SPD의 직접적 하부기관이란 느낌을 떨치기 위해 명칭을 SPD가 아닌 SDP로 하였습니다.

1989~1990년 전환기에 정당의 움직임은 단계별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인 1989년 말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혼돈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구 정당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시민운동은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에 접어들며 새로운 동독정당들이 통합하거나 서독의 정당들이 동독의 정당들과 접촉하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흡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근처에는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감정이래 “우리는 하나의 정당이다!”(Wir sind eine Partei!)란 공감대가 존

4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재하였습니다. 서독정당들은 동독의 위성정당들과도 접촉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통합으로 인한 당원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기민당(CDU)은 통합이후 2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자민당(FDP) 역시 20만명이 증가한 가운데 그 중 13만명이 동독출신이었습니다. 반면 1990년 사민당의 경우에는 당원수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SPD의 당원수가 10만명에 이르렀고 SPD와 SDP가 통합할 당시 약 3만명이 줄어들어 약간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점은 변혁기의 동독 정치지도자 가운데 상당한 수가 동독비밀경찰(Stasi)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동독 SPD의 공동창설자였던 이브라힘 뵈메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Stasi는 새로운 동독정당들에 깊숙히 침투하였던 것입니다. 1990년 동베를린의 프렌츠라우어베르크에 위치한 교회에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군중이 운집하여 변혁을 위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이어서 악명 높았던 Stasi본부를 향하여 행진해갈 때 Stasi 본부에 최초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상당부분은 데모대를 가장한 Stasi요원들로서 이들은 중요 기밀자료·정보를 파괴하거나 탈취하였습니다.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은 유의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서독간의 정당통합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형제정당적 역할을 하였던 동독의 위성정당들은 변혁기에 SED에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CDU는 SPD가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만 수많은 위성정당들의 당원이 CDU에 입당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유일정당인 노동당과 협력하거나 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독에서의 새로운 정당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서독 정당과 연합을

추구하려는 입장과 독립화를 추진하려는 두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평화와 인권(Frieden und Menschenrecht), 녹색당(Grüne Partei) 등은 처음에는 독립화를 추진 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독의 정당조직에 동화되었습니다. 동독의 SDP는 1990년 9월 27일 서독의 SPD와 통합하였습니다.

동독주민들은 통일 이전에 이미 서독의 주요 정치인, 예를 들어 SPD의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슈미트는 물론 FDP의 한스 디트리히 겐서 등에 상당한 정도의 호감을 가졌습니다. 통일직후 실시된 전독일 총선에서 예상과는 달리 CDU가 승리한 배경에는 헬무트 콜 수상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신뢰, 특히 안정되고 강력한 경제력을 건설한 그에 대한 신뢰가 작용하여, 부르조아적임에도 불구하고 CDU에게 동독주민들이 투표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SPD의 선거조직이나 사회적 요소 등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통일 이후 서독정당들의 당헌이나 당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채 그대로 통합정당에 적용되었으며, 동독주민, 당원들은 여기에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 동독출신 정치인들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9일 스테픈 라이헤 브란덴부르크 SPD 당수는 “동부 SPD는 서부 SPD와 다르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뜻은 SPD를 동·서부로 분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 동독지역에서 활동하는 SPD는 동부주민들에게 좀더 다가서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독일 속담에 “윗 셔츠는 바지보다 (몸에) 가깝다”(Das Hemd ist näher als die Hose)란 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셔츠의 역할을 동부지역에 있는 SPD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IMF관리체제하에 놓여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

6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에의 의지는 경제력과 상관관계에 있으며, 경제력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정당활동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엄청난 재정적 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 각자는 자신의 이해에 집착하게 되고 서부지역 주민들은 동부지역 주민들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위기가 점차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동부지역의 SPD가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경제력이 강할 때에만 통일에의 의지가 커질 것입니다. 또한 경제가 나쁜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주민들은 북한주민들을 부담으로 느낄 것이고,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관리해야할 것인지 연구해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싶은 점은 현재 독일의 경제적 문제가 독일통일에 의해 비롯되었다는데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동독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노동당이 유일한 반면 동독에는 SED외에 위성정당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이거나 시민적 성격을 띠었고 어느 정도 정치과정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물론 정치적 전환이 실제 이루어지는데는 이들 위성정당들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당시 동독의 지도적 정치인들이 통일에 역할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상층이 아닌 두번째층에 속하는 정치인들이 서독의 정당에 받아들여지고 이들이 역할하였습니다. CDU의 볼프강 쇼이블레와 통일 협상을 벌였던 쿤터 크라우제가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통일 직후 내각에서 교통부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독일에 “일찍 높이

오른자는 빨리 추락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크라우제는 그후 너무 정치적으로 욕심을 가졌고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독 출신 정치인이 구 동독지역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동독출신이 통일 이후 출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독수상이었던 로타 드메지예나 통일 이후 교육 부장관이었던 오토랩 등도 크라우제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 CDU의 환경부장관인 안젤라 메르켈이나 가족부장관인 놀테는 나이 40이 안되는 여성정치인입니다만 역시 구 동독지역에서 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독출신이 연방정부의 정치인이 되었다는 상징성은 있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 총선에서 SPD가 승리하면 동독출신 정치인들의 연방정부 진출이 진지하게,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독출신 가운데도 전독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많으며, 이번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SPD 당수인 스테픈 라이헤가 그 예라 할 것입니다.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정당통합

손기웅

(민족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1989년 1월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동·서독간 장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50년, 혹은 100년간 거뜬히 존재할 것이라고 천명한지 채 아홉달도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공직에서 쫓겨났고, 장벽은 개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에 찬 예견이 2년도 지나지 않아 동독과 서독연방공화국은 1990년 10월 3일 통일되었다.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이러한 과정은 동·서독의 정당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동독에서 시민운동을 광범위하게 촉진시켰다. 따라서 전독일의 정당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였던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정당체제는 어떠한 통합과정을 겪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을 걸어서 넘어 서독으로 향했고, 동독내부적 변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였다. 1989년 가을에 전개되었던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운동이 주도하였다.

◆ 시민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공개적인 정치적 반대투쟁을 형성해 갈 수 있었는가?

◆ 그 반대운동 속에서 새로운 정당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동독의 정당구조는 공산당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형식적인 다당제였다. 모든 정당들은 이른바 “민족 전선”아래 하나로 움직였다. SED에 의한 지도는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와 이익집단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여졌다.

◆ 그러면 이들 정당, 사회단체, 이익집단은 동독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변화의 초기에 독일의 통일은 정치현안이 아닌 장기적 목적으로 판단되었고, 콜수상이 1989년 11월 28일 제시하였던 “독일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도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성급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냐고 비판받았다. 1990년 1월 8~15일간 일주일은 “변화 중의 변화 주일”이라 불려질 만하다. 내부적 개혁을 표방했던 동독주민들이 이제 서독에의 신속한 편입과 민주적 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 1월말~2월초에 이르러서는 독일통일이 저항운동의 중심목표가 되었다.

◆ 이 시기에 독일통일에 관하여 운동세력내 어떠한 견해차가 존재하였고 표출되었는가?

1990년 2월 중순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동독대표단이 서독을 방문하여 화폐 및 경제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을 때 이미 독일의 통일은 가시권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부터 서독의 정당체제가 동독의 정치적 지형을 재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 서독의 정당들은 어떠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 서독정당의 영향력에 아래 치루어졌던 동독총선(1990.3.18)에서 동독정당들의 정강정책과 선거전략은 어떠한 내용을 가졌는가?

1990년 7월 21일 동·서독의 의회가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을 통과시킴에 따라 독일통일은 사실상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하 가을에 접어들면서 통일조약(1990.10.3)이 발효되기도 전에 서독의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은 동독의 관련 정당들과 정당통합 행사를 가졌다. 정당통합을 통해 각 정당들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야 했다.

◆ 각 정당의 핵심지도부는 어떠한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동·서독 간 인적 통합이 추진되었는가?

정당에 있어서 당원은 선거 및 정당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동·서독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통합정당에 있어서 당원의 지역분포는 정당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각 통합정당은 동독지역에 어느 정도의 당원을 확보하였는가?

◆ 서독의 정당구조가 통합 이후 역학구조상 변화를 보였는가?

경쟁적 민주체제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적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정강정책을 통해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에 동조하는 당원을 확보하며, 선거에서 보다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여 집권하고자 한다. 선거에서는 기본 정강정책 외에 향후 임기간내에 실천할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다.

통일과정에서 정당들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독의 과거청산, 예를 들어 소유권문제,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여졌던 범죄적 행위 등이 쟁점이 되었다. 특히 이들 문제에는 통합정당에 가담하였던 동독인사들도 연루되었다. 한편 통합 이전 각 서독정당 간, 그리고 정당내부에서도 커다란 쟁점이었던 낙태금지에 관한 법률 218조도 새롭게 부각되었다.

- ◆ 통일 이전, 이후 각 정당의 정강정책은 어떻게 변화·전개되었는가?
- ◆ 각 정당 정강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 정당통합 이후 지금까지 각 정당의 정강정책 입안과정에서 동·서독 출신 각측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가?
- ◆ 정당통합 이후 구 서독정당의 이념적 입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정당간 형평성의 유지이다. 따라서 동독정권하 각 정당들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1990년 여름 “동독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재산처리에 관한 독립위원회”(UKPV)가 구성되었다.

- ◆ UKPV의 구성과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는 어떠한가?

민사당(PDS)은 동독공산당 SED의 후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정권의 잔재인 PDS는 통일이 되자마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현재 PDS는 구 동독지역에서 정치적 역량으로서 안정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의미있는 “지역정당”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구 동독지역에서 PDS는 통일 이후 전개된 상황에 실망한 지역주민들에 의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자들은 PDS의 잠재적 지지자가 25~3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유력주간지인 슈피겔은 PDS를 “유일한 동부지역정당”이란 제하의 기사중에 PDS를 “국민정당”으로까지 표현하였다(1995.10.30).

- ◆ PDS가 동부지역에서 약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 PDS가 동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성향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강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치적 위상을 굳힐 수 있었는가?

- ◆ 연방차원은 아니더라도 동부지역에서 SPD가 PDS와 연대할 가능성은 없는가?

PDS는 서부지역 좌파들을 끌어들이며 서부지역에서도 지지세를 확장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 ◆ PDS가 전독일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변화가 시작되기 전 동독인들에 비친 서독정당의 모습은 어떠하였나? 그리고 이후 이 정당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나? 이러한 점은 향후 동부지역에서 독일식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 ◆ 정치정향의 추이가 각 정당에 대한 정체성과 사회적 환경간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통일 이후 동부지역에서 전개된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적 체험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가르쳐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규칙을 아는자만이 민주적 국가에 정체성을 느끼고 민주국가적 기본가치를 지킬 마음의 태세를 가다듬을 수 있다. 여기에 정치교육의 임무가 있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내용·역할, 정치적 의미를 가르친다. SED독재체제가 붕괴된 이후 구 동독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체제를 받아들이는데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교육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였다.

- ◆ 정치교육에 있어서 각 정당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민주체제에 있어서 정당은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민주적 주권을 형성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결집·대변하기 위해 법률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국가적 힘의 원천인 국민들의 최근 독일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당원의 감소가 이를 말해준다. 항상 낮은 수준이었지만 선거인 가운데 정당적으로 조직화된 당원은 1992년의 4%에서 1994년 3%로 낮아졌다. 모든 정당들이 당원, 특히 30세 이하의 청년들을 당원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정당민주주의의 정착에 관한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이 선거참여율이다. 선거참여율 또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1953~1987년간 서독의 연방하원선거에서 선거참여율은 84~91%였다. 그러나 1990년 10월에 실시된 최초의 전독일총선에서 선거참여율은 77.8%였고, 1994년 선거 역시 80% 이하인 79.1%를 보였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두배로 늘어났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동부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통일이 되고 7년이 지난 지금 정당통합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아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 정당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현재 통일에 대한 반대는 어떠한가 그 표출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 의회민주주의의 외적인 형태로 표현될 가능성은 없는가?

동·서부 양지역을 일견해 볼 때 서쪽에서는 극우주의가 정당, 단체, 청년조직 등으로 점차 조직화되거나 언론, 출판, 의회 등으로 제도화되는 경향이라면, 동쪽에서는 돌발적이고, 제도화 수준이 약하고 이

념적으로 취약하여 적극적인 반대, 예를 들어 스킨헤드, 홀리건과 같이 매우 행위지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 ◆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무엇인가?
- ◆ 극우주의의 성장에 독일통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 ◆ 80년대 중반 부각되었던 구 서독의 극우주의가 통일로 인하여 과도기적으로 미봉되었는가, 아니면 통일로 좌초되어 새로운 환경조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극우주의의 부활은 어려운가?
- ◆ 동부지역의 극우주의가 통일과 사회정치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부수현상인가, 아니면 그 뿌리가 역사적으로 동독체제에 내재한 것인가?
- ◆ 극우주의가 현존사회주의의 귀결인가 혹은 독일통일의 산물인가?
- ◆ 소수이나마 극우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장기적으로 기존 민주적 정당들의 해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우려될만한 수준인가?

<토론>

손기웅 박사: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통일 이전 사무총장님의 경력, 즉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가 궁금합니다. 동독내 새로운 정당 형성기에 서독정당들의 지원, 예를 들어 동독에서 SDP가 결성될 당시 서독의 SPD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고, 변혁기의 중심세력이었던 시민운동들은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덕 박사: 동독과 북한과의 차이점을 위성정당의 유무로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것은 북한에도 위성정당들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점진적 통일정책의 추진이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독일에서는 동독공산당인 SED가 민사당(PDS)으로 계승되어 구 동독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지역정당이 생겨난다면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정당통합시에도 독일의 PDS와 같은 북한주민들을 대변하는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통일과정에서 독일은 큰 정치적 위기를 겪지 않았습시다만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준원 박사: 통일 이전 동독주민들이 서독정당들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졌습니까? 동독의 Stasi요원이나 SED의 당원과 같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했고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작센안할트주에는 독일민족연

합(DVU)이 처음으로 주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독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Böttcher: 저는 직업적 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전기를 전공하여 15년간 동베를린에서 교통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저의 정치적 전환은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동독의 경제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였으며, 결정된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1988년부터 동독의 경제체제에 불만과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으나 정치적 변화에 앞장서지는 않고 다만 참여하였습니다. 동베를린 남부에 있는 고향 쾨이겐에서 SDP가 창설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990년에 실시된 최초의 자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SDP의 결성에 SPD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SPD는 SDP의 결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역시 서독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이 결성되었습니다. 다만 서독의 정당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 교회활동을 통해 접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당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환기에 시민운동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통일 이후 이 시민운동은 물론, 그 중심세력들의 상당부분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혁명 당시의 격언 “혁명은 그들의 아이를 잡아먹는다”(Die Revolution frißt ihre Kinder)는 상황이 동독, 독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북한에도 위성정당이 있다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이 그 만큼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가 물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다른 정권의 통일론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은 다양한 통일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PDS문제는 커다란 논의의 대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DS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PDS가 민주적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 동독지역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가 PDS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PDS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개개인 가운데는 능력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당으로서 통합적 능력은 없다고 평가합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전환기에 실제 이루어진 것보다 좀더 잘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 서독의 정당 자체에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여깁니다.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위기가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와 같은 정치인은 통합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동독주민들은 평가했습니다. 현재 SPD의 수상후보인 게르하르트 슈뢰더도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콜수상 역시 통합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여겨졌고, 1994년의 총선에서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으로 16년이나 집권한 것은 너무 길다고 여겨지고, 독일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열차가 자취를 감추었듯이 그도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독에서 엘리트의 평가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개인적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특히 SED 당원인가 여부가 엘리트로 진입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SED 당원은 한 사람도 SPD에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0만명의 SED 당원 전부가 쓸모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DVU는 다른 극우정당과 마찬가지로 골치꺼리입니다.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DVU가 서독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바이에른주의 거부가

많은 돈을 들여 현란한 프랭카드로 대중을 선거에서 현혹시켰고 대중은 여기에 조작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에 존재했던 극우정당들은 하양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 동독지역인 작센주에서 13%의 주민들이 DVU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들이 모두 극우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DVU의 구호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특히 극우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작센주에서 DVU가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독일연방적 차원에서 작센주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센주를 독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 한국에서도 극우정당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Peter Mayer: 지금 독일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회의가 많아지면서 선거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당신의 자식이 정치인이 되는 것을 원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정치인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서도 정치적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과정에서 당시 SPD의 당수였던 한스 포켈이 콜 수상에게 통일, 통합을 함께 협력하며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지만 콜 수장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콜 수상과 CDU가 통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주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공공문제를 다룸에 있어 주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위기 현상입니다. 통일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Böttcher: 물론 정치인들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말해야 하지만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 통합이 이루어진 예는 드뭅니다. 한국은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적 인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적인 정당의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때 언론이 어떠한 입장을 정립하는가가 정치현상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손기웅 박사: 통일과정에서 동독에서 형성된 시민운동 및 정당들간에 통일의 방법이나 속도에 관해 이견은 없었습니까? PDS가 구 동독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 동독지역에서 SPD와 PDS간의 협력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도태 박사: 서독정당들간에 통일에 관해 이견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독정당들이 서독정당들에 통합되는 과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서독정당들의 정치적 공작이 있었습니까? 동독주민들이 동독정당이 아닌 서독정당에 입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Böttcher: 통일 이전 동독정치인들은 동독이 동구권 경제연합체인 COMECON내 최고의 선진국이며 세계 10대공업국이라고 선전하였지만 1987~1988년 동독의 경제상황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진전이 경제상황보다 너무 급속하게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었던 CDU는 동독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자 통일의

가능성을 재빨리 간파하고 정당확장의 호기로도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SPD는 통일과정에 진지하게 참여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1990년 중반 CDU는 동독과 화폐 및 경제통합 협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동독주민들이 가장 바랐던 점이 화폐통합이라는 사실을 CDU는 잘 파악했던 결과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전 시민운동간에는 동독의 변화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시민운동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PDS는 한편으로는 SPD의 정치프로그램과 부합하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적이기도한 정강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넓은 스펙트럼의 정강정책으로 인해 선거에서 구 동독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SPD 경향의 공산당정책에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SPD와 PDS간의 협력가능성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 차원, 주의회 차원, 연방의회 차원 등으로 구분지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PDS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그중에는 건설적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구 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주에서는 주민의 13%가 극우정당에 표를 던졌고 PDS에도 강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PDS 지지자들은 DVU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PDS 지지자의 대부분을 DVU집단과 동일시 해서는 안됩니다만 이 두정당의 성공요인은 유사합니다. SPD와 PDS간의 협력가능성은 작센안할트주에는 있다고 봅니다. SPD는 작센안할트주에서 절대다수당이 아니며, 따라서 PDS와 협력하는 것이 DVU와 협력하는 것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CDU를 포함하는 대연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당과 협력할 것인가는 사안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라우제는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지만 모든 동독출신 정치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톨페, 라이헤, 힐데브란트와 같은 정치인들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독정당의 서독정당에로의 통합과정에서 자발성 여부는 차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SPD의 경우 동독주민들은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서독정당들이 동독지역에서 군림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서적 반감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서독정당들이 동독에 너무 신속하게 우월감을 가지고 들어오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탁 과장: 통일 이후 동독지역내 정당들은 1990년의 3월 총선,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10월 주의회 선거, 그리고 1994년 10월 13대총선 등 여러차례의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갔다고 봅니다. 정당통합과정에서 동독인들은 정치교육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과정에서 서독정당, 특히 SPD가 동독지역내 자매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통일 이전 독일에는 SPD와 같은 중도 좌파정당이 존재하여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중도 좌파정당이 부재합니다. 통일과정에서 중도 좌파정당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서독정당들간 통일정책은 유사합니다. 그 이유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당들의 정강정책이 유사했기 때문입니까? PDS가 구 동독지역에서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선거에서는 연방의회로의 진입조차 의문시됩니다. 이 경우 통일에 대한 불만층이 극우세력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SPD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Böttcher: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선거참여는 계속 보장되었지만, 통일 이후 좌절감으로 참여율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통일 이후 사회교육을 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하는데 있어 선전용 프랭카드만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높은 실업율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들이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정당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대화를 하고자 원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일궈낸 쿨수상의 역량은 인정하지만, 구 동독지역 주민들이 그를 우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들내에 세대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SPD는 구 동독지역에서 노년층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나 극우세력에 대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불만족한 수준입니다.

PDS 역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DS 지지자 가운데 노년층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간계층과 독일 통합과정의 문제점들을 늦게 인식한 50~55세 장년층이 PDS 지지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0~40대 후반 유권자들의 지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전환후 사업에 종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기독교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SPD가 아니라 CDU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 이웃은 동독시절 북한, 아프가니스탄, 제3세계 군사정권과 화학약품을 거래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전환후 서독 함부르크 화학공장의 동구담당 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요즈음 마치 자신이 과거에 동독 공산주의를 원수처럼 비난했던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독일에서는 고개

를 싹 바꾸는 기회주의자 “Wende Hälse”라 부릅니다.

서독내에서는 1989년까지 좌파 정당 설립이 가능했으나 정강정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단후 서독내 공산당의 활동이 금지된 후 공산주의적 정당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한 좌파정당들은 공산당 지지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독내에서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독주민들은 상당부분이 2차대전을 경험하였고 전쟁을 반대하면서 공산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은 평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PDS가 구 동독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구 서독지역 실업율이 10%인데 반하여 구 동독지역에는 20% 달하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동부나 서부 한쪽 지역으로부터가 아니라 양쪽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형중 박사: 통일과정에서 슈타지(Stasi)에 의한 서독정당에 대한 침투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치통합과정에서 동독출신 슈타지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통합과정에서 동·서독 SPD간에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당원구성은 어떠하며 양지역 출신간에 이질성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Böttcher: 통일 이전 슈타지의 활동은 광범위 하였습니다. 슈타지는 통일직전까지도 사회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슈타지는 국민들의 정치이념을 조작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이밖에도 경제·사회·산업정보요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SPD는 교회출신이 많은데 이 중 상당수가 슈타지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서독의 수도 본의

상류 및 중간층에도 슈타지의 연루자가 있었습니다. 주민조작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북한의 침투, 특히 중국을 경유한 침투가 있을 것입니다.

동·서지역의 SPD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0여년간의 양독 정당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구 서독지역에서 개최된 많은 SPD 모임에 참가하였지만 분위기상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주제, 접근하는 방법, 시각 등에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지역적 특색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서의 SPD가 상이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개의 SPD가 한 지붕밑에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독일인이 아니라 한 유럽인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에만 국한하여 사고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입니다. 폴란드와 인접한 브란덴부르크주는 하천정화 등에 폴란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당입니다. 역사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동·서지역 SPD의 중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통분모가 많아져 하나로 성장해야 할 것이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운 박사: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서독이 협력, 접촉하였기 때문에 정당통합이 좀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접촉을 꾸준히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öttcher: 전환 이전 서독과 경제적으로 교류했던 사람들 가운데 전환 이후 통합된 정당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교류가 쉽게 우호적 정당의 성립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서독 가족이 상봉하고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큰 영향

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1989년 이전에 제 자신이 서독이나 외국을 가 보지 못했고 서독에 친척도 없었습니다만 저는 동독의 SDP 창설에 참여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자식간의 텃줄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한 교류가 전환 이후 큰 연결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목사이며 법률가이기도한 현 브란덴부르크 주지사인 만프레드 스톨페는 동·서간 교회협력시 법적 측면에서 조언하였으며 전환기에 서독의 협상파트너로 활약하였습니다. 그가 슈타지와 관계하였다고 하나 서독과 교회협력시에 슈타지와 접촉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동독에서는 신호등을 하나 세워도 슈타지와 관계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2 회의

- 주 제: 동·서독의 의회제도 통합과 한반도 통일
- 발 제: 박형중 박사(민족통일연구원)
Herr Steffen Reiche
(브란덴부르크주 과학기술문화부장관)
- 토론자: 여인곤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신덕수 교수(통일교육원)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박영호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이권우 조사관(국회의무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남북한 의회 통합 방안

박 형 중

(민족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차대전 이후 서독은 독일통일의 이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을 현실정치의 목표로는 포기하면서 양 독일간 관계의 평화적 조절에 만족해야 했다. 양 독일 국가의 경제·문화적 차원에서의 관계확대는 안보·정치분야에서의 현상유지 등 평화공존 원칙 때문에 가능했다. 경제·문화차원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통일이후에도 양독

일의 시민들은 비교적 쉽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으며, 통일된 사회체제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비교적 쉬웠다.

남북한 사이에는 독일과는 다른 상황이 지배했다. 남북한은 곧바로 통일을 이룰 것을 서로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생존권을 부인했다. 그 결과는 통일이 아니라 영속하는 적대관계였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 완전한 격리였다. 남북한은 안보·정치적으로 원칙적이고 안전한 관계를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평화롭고 상호 이익되게 조정할 수 없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새 정부는 통일을 우선적 목표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우선적으로 북한과 평화공존 관계를 형성해내고자 한다. 새 정부는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개념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제위기이다. 남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는 북한과의 안정된 관계와 북한 내부의 안정이다. 북한의 불안정과 남북한의 긴장은 한국의 외자유치노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은 정부의 현시적 정책목표는 아니다. 새정부는 북한과 공존과 교류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원한다.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통합될 것이다. 남북한의 의회도 통합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의회를 이룰 것이다.

이 글의 주제는 남북한의 의회통합인 데, 이는 남북한의 단계적·점진적 통일과정과 분리되어서 논의될 수 없다. 여기서는 통일의 각 단계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서술하면서, 남북한 의회통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남북한 통일의 원칙과 단계

가. 원칙

- (1)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의 이념적, 정치적 이질화 및 대립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2)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각 분야별 교류·협력에 의하여 동질성이 증가해야 하며, 동시에 정치·군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나. 단계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3단계를 거친다. 남북한 의회통합의 문제는 남북연합 단계와 통일국가 단계에서 제기된다.

통일단계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통일내용	초보적 민족통합	민족통합	국가통합
국가·체제	1민족2국가2체제	1민족2국가2체제	1민족1국가1체제
정치통합의 단계	별개의 정치체제	초보적 정치통합	정치통합
의회통합의 단계		남북 평의회	남북한 통일 의회

2. 통일의 각 단계와 정치·의회 통합의 과제

가. 화해·협력 단계

(1) 성격

화해·협력 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간 사회·문화·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체계가 정착되는 단계이다. 1991년 채택된 '기본합의서' 및 각종 '부속합의서'의 이행 실천에 의해서 남북 화해·협력 관계가 제도화된다.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치·군사적 측면의 관계 개선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개선을 토대로 남북한은 남북 연합 단계로 진입한다.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남북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고위급회담 산하에 각급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정례화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틀을 정착시킨다. 남북한은 화해·협력 관계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는 화해·협력 단계를 남북연합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의 기본성격, 통일방안, 남북연합의 설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여,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한다.

(2) 정치기구 구성 운영방안

① 남북고위급 회담

이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남북현안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해서 협의 결정하는 최고위급 결정기구이다. 총리간 회담 또는 특사교환 형식을 가질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이는 남북고위급 회담 산하기구로서 '기본합의서' 각 분야별 업무에 대한 협의이행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분과위원회 산하에 보다 세부적 업무를 처리할 공동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 연락사무소

이는 남북간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남북간 합의 사항의 이행에 관련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④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연합 현장

화해·협력 단계가 정착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연합의 설정·운영방안에 대한 남북연합현장을 채택하여, 남북연합단계로 이행한다.

나. 남북연합 단계

(1) 성격

통일을 위한 과도단계인 남북연합은 통상 국제법적인 연방 또는 국가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은 연방과 다르다. 또한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국가연합과도 다르다. 물론 남북연합은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남북연합에서 남북한은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현안 및 통일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연합은 주권 국가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국가연합과도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북한의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간 산업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 공동투자,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지원 등을 실시한다. 외교·국방 분야에서 군축과 검증이 실시되고 통일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군통합을 이룬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화해·협력 단계의 남북대화 창구를 발전시켜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상주연락대표부, 남북분쟁해결기구 등의 정치제도들을 구성·운영한다. 이러한 정치제도 운영을 통하여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치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남북간 가치관 통합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촉구하는 한편, 각종 지역단체, 직업 단체간 협

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남북간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남북한은 통일시기,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조치, 통일 국가의 대내외 정책 등에 관하여 남북간 '통일조약'을 체결한다. 통일시기와 통일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통일헌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결성함으로써, 남북한은 통일단계로 접어든다.

(2) 정치기구의 구성 운영방안

① 남북정상회담

이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현안 및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남북각료회의

이는 남북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결정사항을 실천하는 협의 집행기구이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한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남북한 각료로 구성된다. 남북정상회의에서 부여된 사업을 실행하고 남북연합 현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입안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③ 남북 평의회

남북 평의회는 남북한 의회 통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가) 성격과 임무

남북평의회는 남북연합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남북각료회의에 대해서 자문하고 통일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통일의 실현방법과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 협의하는 임무를 지닌다. 남북연합의 초기단계에서 남북평의회는 입법권을 지니지 않고,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자문기구 성격을 갖는다. 남북연합이 진행함에 따라 남북평의회는 권한을 점차 강화하여, 남북한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입법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구성

남북평의회는 양측 국회의원 중에서 같은 수를 뽑아 총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평의회는 남북한 공동 의장제에 따라 운영한다. 남북각료회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 3개월 마다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다) 통일헌법의 마련

통일헌법 마련시, 남북한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의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든다. 통일헌법의 합의 과정에서 남북한 의원대표들은 통일 국가의 정치이념, 국호, 국가 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 형태는 물론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시기, 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한다. 남북평의회에서 마련된 통일헌법 초안은 남북한의 국회에서 각각 비준되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다. 통일국가 단계

(1) 성격

남북한이 영토적·체제적으로 통합되어 법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며,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다.

통일국가 성립에 따라, 남북한에 동질적 정치체제가 성립하며, 대외적으로 남북한의 조약 및 협정과 대외관계를 정비·통합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북한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북한 지역의 토지 및 기업의 사유화, 북한 지역 기업의 경영합리화,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등을 실시한다. 통일후 각종 사회·문화단체의 통합을 통하여 사회·문화 분야의 동질성 확대 및 통일후 사회적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다.

통일후 정치제도는 남북한의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계층갈등과 이익갈등 등과 각종 이익균열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장치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구조와 의회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력 배분문제 등을 논의한다.

(2) 통일한국의 권력 구조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남북한간의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적 권력구조가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통일후 직면하게 될 산적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효율적 권력구조가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남북한을 통

한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

통일을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다수결모델(majoritarian model)보다는 소수의 거부권이 인정되는 합의모델(consensus model)이 바람직하다.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반대정파간에 정책과 지지기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권력이동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한 권력의 독점이 허용되는 다수결 모델이 가능하다. 통일한국과 같이 이질적인 두체제가 결합하였을 경우, 사회균열구조가 다차원적(이념적, 지역적, 계층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소외집단의 출현 역시 불가피하다. 이질적 사회에서는 정파간의 이념 및 정책의 차이가 크고 정권의 이양도 그다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모델보다는 합의모델이 적합하다.

① 정부형태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통령제를 선택할 경우, 남한에 의한 권력독점과 북한의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4~5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위원회를 두거나 부통령제를 두어, 북한출신의 인사를 참여시킨다.

내각제는 통일이후의 다차원적 사회균열 구조를 반영하고 남북한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대통령제보다도 더욱 적합한 제도이다.

② 온건다당제의 필요성

통일한국에서는 다차원적 사회균열 때문에 다당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극좌, 극우 정당의 생성을 억제하고, 중도우파정당 및 중도좌파정당이 중간 영역을 점유하는 온건 다당제를 축성할 필요가 있다. 온건 다당제의 성립을 위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극단 정당들에 대한 금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수정당 난립 방지를 위한 배제조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③ 선거제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대표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호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다수정당의 출현을 조장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갈등을 체제내로 수렴하고 다양한 이익현상을 정치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의회제도

남북한의 화합을 추구하기 위하여 양원제를 고려할 수 있다. 양원제는 단원제에 비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간 갈등구조를 완화시키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단원제 의회는 남북한간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원구성을 인구비례에 따를 경우, 의회에서 남한지역은 과다대표되고 북한지역은 과소대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후 구성되는

양원제에서 상원은 남북동수의 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인구비례에 의하여 구성한다. 하원에서는 남측이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이지만, 상원을 통해 북측의 지역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3. 결론

단계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동·서독간의 평화적이고 비교적 성공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동·서독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의 신연방주들은 서독의 정치, 행정, 군사, 경제 체제에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이차대전 이전에 이미 정부행정과 민주주의에서 독일적 전통이 확립되었으며, 통일이전에도 양독 국민은 서독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의 여러 집단 간에 서방적 제도체계에 대한 심각한 태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독일통일은 양 지역의 생활수준차이의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것을 완수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소비의 구조와 수준에서 동·서독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와 음식, 해외여행, 의사소통수단의 구매, 가구 등에서 그러하다. 또한 소득수준은 아직 동일하지 않지만, 가구당 소득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50년간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문화에 심대한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쉽게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에서 소비와 소득의 구조와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정치안정과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 바,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지역의 생활수준은 가까워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동·서독 통합을 성공시킨 요소들이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한국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장기간에 걸친 공존과 교류 관계를 통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장벽과 생활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성급하게 통일되는 경우, 남북한은 형식적으로 통합되었지만, 남북한에 두 가지 별개의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통일된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내부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통일이후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며, 선거, 의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정치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남북한 의회 통합 방안

Herr Steffen Reiche

(브란덴부르크주 과학기술문화부 장관)

먼저 저를 초청해주신 민족통일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에 극동지방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포츠담의 동·서독
장벽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어렸을때부터 거의 30년동안 날마다
장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동·서
독의 통일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은 끝이 났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
도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이념적 체제적 갈등에 의해서 특징지워졌습니다. 유럽에
서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하여 1989~90년에 끝났습니다. 유럽의 20
세기는 매우 짧았으나, 한국은 아직도 20세기를 특징지우는 갈등상태
하에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독일은 그 갈등을 성립시키는데 주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1990년대가 끝나는 무렵에 20세기가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장소에 오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한국에서 통일과정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
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세력이 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서 매우 놀랐습니다. 저도 목사집안에서 태어났는 데,
여기 통역으로 나오신 조박사께서도 목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
십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기 이 자리에
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우 흥미를 느끼는 것은 한국의 사람들은 동독과는 매우 다르게 통일에 대해서 준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독은 말 그대로 통일에 갑자기 맞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시작되고서도 실제로 통일이라는 것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와 다르게 통일에 대해 이미 상당량의 연구를 진척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박형중 박사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통합 단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통합과정이 한창 진행 중에서야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교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과 체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개인적 경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여기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개인적 차원에서 제가 정치활동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떻게 현재 이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략하게 인민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여러 원본문서, 책, 사진, 통계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새로이 탄생한 연방의 여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8~9년 동안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저의 발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연방의회 또는 동독지역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실천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 10월 7일, 즉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베를린 근처의 목사집에서 불법적으로 독일사회민주당(SDP)를 창당했습니다. 창당 선언서에는 43명이 서명했습니다. 10월 7일을 창당일로 삼았던 것은 그날이 바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창건 40주년 기념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독정권이 불온시하는 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동독 체제에 대한 우리의 항의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 또

는 단순한 모임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당을 조직하여 의회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두 개의 손이 마주잡고 있습니다.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상징합니다. 1946년 4월 두 정당의 강제통합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동독지역 사회민주당의 해체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강제로 통합된 이후 2년이 지나자,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형사범죄의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정당의 강제통합과 함께 동독지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민당이 다시 재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사민당의 소생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동독공산당이 다른 정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운영하던 외곽단체인 민족전선은 붕괴했고, 40년동안 민족전선에 속해있던 개별 정당들은 전혀 다르게 변모했습니다.

동독에서 1990년 3월 투표일을 목표로 선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독인들은 이 낯설은 선거전에 당황했습니다. 동독의회의 선거전이 서독식으로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독인들은 선거전에 텔레비전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동독주민이나 정치가는 전혀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서독 간에 마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서독의 지원하에 동독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모드로, 드메지어와 같은 동독정치가들은 엄청난 거구인 서독의 팔에 비교할 때, 신체적으로도 매우 왜소했는데, 이러한 신체적 차이가 마치 동·서독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듯 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 데, 갑자기 동독사람들이 의사당에 들어 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독 의사당이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사용해서 지어졌다는 서독측의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두달 동안 임시 장소에서 의회가 개원되어야 했습니다. 의회를 선출하기는 했지만 동독사람들은 이 의회가 자신을 제대로 대표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교육에 대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연방정치교육청, 전독성은 엄청난 양의 정치교육용 서적을 인쇄하여 동독지역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당 관련 재단 예를 들어 에버트재단도 동독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정치교육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서독의 정당들도 해당 동독당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노력은 의회제도 정착에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동독자유선거에서 선출된 인민의회의원들이, 다음번의 새로운 주의회선거에서 거의 낙선했기 때문입니다. 동독 인민의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인민의회 의원이었던 자는 다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이 마지막 동독의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독주민들 사이에서는 별로 신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동독주민의 마음이 서독연방의회에 가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민의회는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과도기를 정당화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은 했습니다. 따라서 과도기는 비민주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과정은 아니었으며, 어쨌든 주민이 선거하고 정당성을 준 대의 기관에 의해 관리된 것입니다. 인민의회는 통일조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이밖에도 부분적으로 아직도 유효한 여러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 동독인민의회는 동독 과거 청산과 슈타지 문서 처리에 관한 것, 다양한 연금지급 규정에 관한 것, 재산권, 주의회 선거법, 지방자치 선거에 관한 모든 법령, 모든 동독내의 내부법령 등을 준비하고 의결했습니다. 원탁회의에서 헌법 제정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있었고, 이 토론은 부분적으로 인민의회

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은 나아가 주의회들에서도 진행되어, 주 헌법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최초의 전독 연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건설하고자한 두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 의해서 건설된 의회민주주의는 아직도 존재할 뿐 아니라 그 효력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동독 국가가 (구서독)독일연방에 편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구 독일연방에는 11개의 연방주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인구는 1,600만입니다. 구 동독 전체가 하나의 연방주를 이루어 서독에 편입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마지막이자 가장 신참의 연방주가 가장 주민수가 많은 연방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 동독지역이 통일독일에서도 단일 지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입후에도 여전히 동독 역사 속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독의 서독 연방에의 통합은 구 동독 지역이 수개의 개별 연방주로 나누어 서독에 편입하는 방식이 취해졌습니다. 통일조약 제 1조는 동독의 서독 편입과 함께, 브란덴부르크, 메클레부르크-포어포먼,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이 통일 독일연방의 연방주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동독의 개별 연방주와 주의회가 통일독일의 전체 연방에 편입되는 형식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편입방식은 각 신연방주가 구 동독의 그늘에서 벗어나, 동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역사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 연방주는 구 동독 이전의 역사에 기초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센은 과거 오래된 왕국이었으며 브란덴부르크는 프로이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의 토론 주제는 동독주민의 의회민주주의체제로의 통합

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의회제도 중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여졌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동독지역에 성립한 의회제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독에 성립해 있는 바 그대로의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우리에게 적용했으며, 그것도 즉각적이고도 매우 의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연방주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의회는 동·서독의 협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 내게 하는 창구이며, 동독지역에 가장 빠르게 좋은 생활조건을 만들어 내는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독측 의원들의 주요한 관심은 서독 의회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어떻게 빨리 숙달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제는 40년 동안 실습되었으며, 그 실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차대전후 구 서독 연방주에 도입된 제도는 이미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오랜 기간의 헌법논쟁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찌 패망이후에는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한 원인이 규명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구 제도는 미국과 공동으로 교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서독에서 40여년 동안 실습되었습니다. 이점이 한국과 다른 점인데,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경험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한국실정에 맞게 적용시키는 데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이 되면 남북한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경우 남북한이 함께 새로운 실정에 맞는 민주적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후 신연방주들은 주마다 사법, 경찰, 지방행정, 대학 등에 대한 지방법령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구 연방주에는 수십년 동안 이러한

법령이 제정·개선되어 왔는데, 신연방주에서는 2~3년 만에 법령이 갖추어 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2~3년 만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제정작업을 해낸 것입니다. 이중 많은 것은 서독 구 법령을 기초로 해서 탄생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매우 현대적 법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경우와는 달리 연방법은 신연방주가 서독에 편입되자 자동으로 유효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세가지 기둥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세분야의 인적구성이 동독지역에서 매우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의회는 거의 동독출신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주의회는 2~3퍼센트, 많아야 6퍼센트 정도 만이 서독출신자입니다. 행정부 구성에서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주지사 중에서 브란덴부르크만이 동독출신입니다. 다른 주 즉, 메클렌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에서 동독출신을 주지사로 내세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튀링겐에서는 서독출신 주지사가 도전받지 않고 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가장 큰 신연방주인 작센에서는 처음부터 서독출신이 주지사였고,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에서는 동독출신이 들어섰다가 곧 물러났습니다. 장관들의 구성은 분야마다 달랐습니다. 재정부장관, 법무부 장관은 거의 예외없이 서독출신입니다. 또는 이중구조로서 동독 장관 밑에 서독출신 차관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법과 관련해서는 판사와 검사의 거의 대부분이 서독출신자들입니다.

의회발전에 대해서는 어만 그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잠정적으로 의회 바깥에서 공동결정권을 행사하려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의구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 원탁회의를 재시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동독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이 노조, 실업자연맹, 다른 정당당원들을 끌어 들여, 민주사회당을 위한 일중

의 외곽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외곽조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민주사회당은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당은 이 위원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고 여론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실업율이 25~30퍼센트에 달했고, 기업합리화와 도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엇인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구현위원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편승했지만, 그러한 호소를 처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토론>

Böttcher: 먼저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중 박사님의 발제에서 남북한과 동·서독의 통일 조건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동·서독의 통일조건이 남북한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고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서독 관계는 1972년 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냉전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서독 관계가 나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가지 사건은 1948년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베를린에 대한 봉쇄입니다. 서독시민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연합군은 비행기 공수를 통해서 식량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1953년에 동베를린의 노동자들이 봉기하자, 소련군은 군대를 동원하여 노동자와 주민들을 진압했습니다.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 정치적 긴장이 발생하면 동시에 동독에서도 긴장이 발생했고, 주민에 대한 억압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동·서독관계와 남북한 관계에 큰 차이가 있다면, 남북한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경험은 남북한 주민 간의 통합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며, 이 때문에 남북한 통합은 동·서독 통합과는 달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박형중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 저의 두 번째 질문은 박형중 박사께서 제시하신 표에 보면,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민족통합,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국가통합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통일이후에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인곤 박사: 박형중 박사님의 의견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문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겠습니다. 박형중 박사께서는 우리 나라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의회통합에 관해서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박형중 박사께서 독일에서 공부했고, 우리가 한·독위크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의회통합에 대해서 얼마간 설명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선거법에서 정당의 의회구성관련 5%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당제가 정착될 경우 이러한 5% 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독일 정당통합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독일측이 남북한의 의회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의회제도, 특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중 박사님께서서는 남북한간의 점진적 통일만을 상정하고 계신데, 남북한의 경우도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흡수통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의회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제문에서는 통일후 정치체제로서 ‘의원내각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저는 이에 찬성합니다. 현재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통일후 정치체제로서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회제도로써 양원제 여부는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덕수 교수: 통일한국의 권력구조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다수결보다 합의모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한국의 현정부 출범은 공동연합정권 담당자들이 임기 전반에 대통령제, 후반기에는 내각제를

약속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현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두 정권연합 세력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통일과 관련한 정치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그 효율성여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제가 효율적이라는 데 통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후에는 효율성과 함께 남북화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내각제가 합당하며,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각제가 반드시 비효율적 제도는 아닙니다. 의원내각제를 통일 당시에 익숙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험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일후 의원내각제를 통해 남북한간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이후에도 대통령제를 계속유지하여 전국단위의 총선거를 실시 그 결과로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단순 다수 득표를 획득한 측은 모든 것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측은 모든 발언권을 거부당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다수제에 의한 대통령제는 통일이후의 화합적 모델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화합차원에서 의원내각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통일후 총선거에 있어 지역민심 반영과 소수의 권리 및 발언 지분 제고를 위한 체제로서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합니다.

셋째, 대통령제만이 지도력을 갖고 의원내각제는 지도력이 없다는 것은 독일사례를 통해 볼 때 항상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후 정부형태를 현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예멘식 모델인 4~5명의 대통령위원회 혹은 부통령제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형중 박사: 여러분의 토론에 감사합니다. Böttcher씨께서 동·서독간의 관계가 남북한보다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론을 제

시하셨습니다. 그런데 Böttcher씨가 지적하신대로, 동·서독은 남북한과는 다르게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냉전이 격했던 시기에 동·서독간에 치열한 갈등상황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서긴장 완화, 그리고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의 동·서독간 관계와는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건하고 유화적이었으며, 여러 형태의 두터운 교류와 협력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서독 관계는 남북한관계 보다 통일을 위해 유리한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전쟁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모든 교류를 단절시키게 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동·서독은 두 개의 군사블록에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따라서 세계전쟁을 도박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절멸하거나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시도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변경에의 포기는 양 독일 국가가 잠시 통일이라는 목표를 접어두고 현상을 관리하고 인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부재했고, 이것 때문에, 남북한 양측이 항상적으로 안보상의 위협이 되었고, 따라서 현상을 관리하고 인간화시키는 정책 방향으로의 선회가 매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과 북은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지만 남과 북 사이에는 다방면에 걸쳐 교류가 자유로워지고 또한 제도화될 것입니다. 즉 아직 두 국가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과 북의 주민간의 통합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에서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민족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통일국가 단계에서 '국가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후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독간의 인구비는 4:1, 일인당국민총생산은 2:1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남

북한의 경우에 인구비는 2:1, 일인당 국민총생산은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1:1 정도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의 경우, 한국은 서독에 비하여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한국 내부에서 많은 낙관적인 견해는, 서독의 경우보다는 어렵지만 한국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북측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많은 사양 산업, 유휴설비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북한에 이전하게 되면, 북한의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부흥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의회제도는 단원제이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제도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거 및 최고인민회의는 동독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동독의 경우에는 동독공산당이 민족인민전선이라는 외곽단체를 통해서, 이른바 자매정당을 통합관리하는 방식의 선거명부를 제시하는 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외곽조직없이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직접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정부는 대북정책 원칙의 하나로써 흡수통일 배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안정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통일은 한국이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과도시기를 거치면, 남북한 사이의 정치체제, 그리고 의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원칙은 여기에서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바와 같은 남북한 정치 통합의 원칙은 통일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남북한이 합의적으로 처리하는 데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내각제나 양원제, 온건다당제 성립을 위한 5% 제한규정 등도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진욱 박사: 양원제는 하원의 인구비례,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 채택된 제도입니다. 독일의 양원제도 이와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독일이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통합후 양독간 심리적 괴리 극복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독일 상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동독지역의 하원의원은 모두 동독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군 의회의 주지사 및 군수 경우 서독출신 구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öttcher: 독일은 전통적 의미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원만이 직접 선출되며 상원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연방의회(Bundestag)의 의원(하원)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며, 상원(Landtag)은 16개주 대표로서 연방간 균형을 이루는 기능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각 주가 상원에 보내는 의원수는 각 주의 인구비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독 5개주도 인구구성비에 따라 각각 상원에 의원을 보냅니다.

내각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다 공정하게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 통일이전 이 제도를 충분히 경험하여 통합후 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일은 이미 2차대전 이전에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어서 통일후 지역주의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독의 최고 인민회의 위원도 선출이 되긴 하지만 선출방식의 민주성, 선출된 위원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1946년 동독의 사민당과 공산당간의 통합은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독공산당의 붕괴는 시민들의 지지율하락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통합후 지역간 정치·사회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소의 소외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동독 선출직 지방관료 중에 서독 출신이 많은 것은 통일이후 동독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자, 상당한 수의 서독 출신 관료와 정치가가 동독으로 이주해왔던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통합후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동독지역에는 서독식 행정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1990년 가을 브란덴부르크주 거주자가 아닌 외부 출신의 행정 전문가라도 의원이나 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2차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더 이상 외부출신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니다. 통일 4년이 지난후 행정 및 기타 통합과 관련한 긴급한 사항은 거의 다 안정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독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굳이 선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법 개정이후에도 피선거권자의 제1거주지역이 입후보자의 중요 제한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외부 거주자의 당선은 통일후 1~2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부영 의원: 동·서독간 의회·정당·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우호적인 외적 조건 때문에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소간 경쟁결과 소련의 몰락, 소련군 철수, 서독의 일관된 동방정책 등이 동·서독 체제통합의 외적조건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민족간 전쟁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류·협력의 경험이 많아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외적 환경과 40여년간의 준비가 체제통합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0년사이 동독체제붕괴 과정에서 새의회 선거, 초기 대연정 의회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독체제를 유지해왔던 경찰,

군, 정보기관이 무력화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독일통일과정에서 구 동독의 정보기관과 같은 국가의 중요 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지난 40년간 준비된 최상의 민주적 정치체제·제도·교육체제 등을 3~4년안에 동독에 이식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사법부를 구성함에 거의 전적으로 서독출신사람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동독사람들이 서독인들에 의한 식민화 혹은 점령통치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독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는지요?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해방이후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후 한국정치 공간에서는 이념적 극우·극좌 정당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중도노선의 정당들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도·좌우를 대표하는 이념적 정당들 대신에 보수주의를 기반으로하면서 지역적 패권을 다투는 지역주의 정당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바, 이념적 차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의 정당이 통일을 준비하는데서 당면하게 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북한주민들의 남한의 지역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호 박사: 약 5년전에 통일후 국민통합 방안을 연구하면서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많이 차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에서도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독 주민은 서독의 체제를 원했는데, 북한의 주민들이 한국의 정치체제를 원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한편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북한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지, 남북한 사이의 정치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통일 동독에서 의회는 거의 동독 출신자에 의

해서 장악되었고, 그에 반해서 행정·사법부는 서독출신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동·서독과 같은 정치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도 통일시 행정·사법과 같이 과거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부를 선호했는지, 서독의 제도를 선호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후 선거 과정에서 매우 많은 수의 정당과 정치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동독 상층 정치 엘리트들이 통일 이후의 정치활동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권우 조사관: 간결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히 장관께서 동·서독의 정당과 의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의 역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서독 정당의 활발한 역할, 그리고 그 파트너였던 동독 정당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과 의회에 관계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회와 정당관계는 1980년대까지 한 집권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그것이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동·서독의 경우 정당과 의회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의회보다는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됩니다. 의회는 형식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합니다. 독일통일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서독의 기본법에는 두가지 통일방식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3조는

흡수통일, 146조는 합의통일을 함축합니다. 이 서로 충돌하는 두 조항이 어떻게 기본법에 동시에 기록되었는지요. 동독측이 23조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약 800명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동독주민의 동독이탈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통일이전 서독은 동독이탈 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 어떠한 방침에서 관리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iche:

<동독여권 소지자의 서독 시민으로 인정에 관한 문제>

모든 동독여권을 가진 동독시민은 즉각적으로 서독시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986년 서독을 방문했을 때, 나는 서독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했습니다. 놀랄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한국에 독일여권이 아니라 구 동독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새 여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였는데, 통관과정에서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독은 이러한 조항을 서독의 헌법과 법령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거했다면, 동독시민이 서독시민으로 취급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독은 아마도 훨씬 일찍 동독주민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허가했을 것입니다.(동독은 장벽 붕괴를 전후하여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허가했음-번역자) 동독주민이 프랑스에 출장갔다가 서독으로 들어가면 동독여권을 한시간내에 서독여권으로 교환해주었고, 프랑스는 동독주민을 서독주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동독사람들이 알았다면, 더 많은 동독사람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외 독일동포 문제는 동독주민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폴란드, 러시아, 아르헨티나에 사는 독일혈통을 가지는 주민은 독일에로의 재이주를 신청할 수 있고 서독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매년 6~7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독일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독일이주 2~3세대 주민입니다. 이들을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은, 독일 세파드만 가지면 다 독일사람이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재이주는 서독일의 매우 독특한 국적부여 정책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부여가 되지만, 독일에서는 혈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독 기본법 제23조와 146조에 관한 질문>

기본법 23조와 146조와 관한 것입니다. 옳게 지적하신대로, 이 두 조항 사항에는 일정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23조는 기본적으로 1949년 이후 기본법이 제정된 직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동독지역에) 1952년까지 존재했던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겐, 작센 등의 연방주가 서독에 편입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동독의 보호국이었던 소련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146조는 언젠가 양독의 보호국가들이 양 독일을 풀어놓을 때 자유속에서의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당의 동독 자매정당에 대한 영향>

정당과 정부, 또는 교섭단체와 정부, 이 삼자는 서로 연관된 부분을 이루고 있고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은 입후자를 내세우고, 선거전을 치루고, 정강정책을 결정합니다. 의회내의 교섭단체들은 수상을 선출하고, 예산을 책정하며, 입법전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의 관계는 매우 가깝고, 긴장관계는 여당과 야당사이에 존재합니다. 주의회 또는 의회와 정부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구조를 가진 국가도 있지만, 우리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회의 정부는 여당교섭단체와 협력하며, 여당은 정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의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동독 시민당은 서독 시민당 때문에 한층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독 시민당이 처음에는 22퍼센트, 나중에는 37퍼센트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 시민당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민주당의 경우는 한층 더합니다. 서독 기독교민주당이 없었다면, 동독 기독교민주당은 48퍼센트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독 정당들은 서독 자매당에 의존했었습니다. 서독 자매당이 없었다면, 선거전도 조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복사기, 선거자료, 여러 원조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민주사회당(PDS)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독 자매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당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구동독정당의 재산권(의 몰수)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민사당은 아직도 다른 정당보다 훨씬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3~4배나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당시 동독 엘리트들의 현재 상황>

통일당시의 동독엘리트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서 물러나기 직전이거나 또는 아주 물러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주로 일종의 대표직에 해당하는 것들을 맡고 있는데, 확실한 노동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직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비교적 대대적인 엘리트 교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독시절에 오점이 없었던 자들이 새로운 엘리트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의 Böttcher씨도 동독시절에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정치활동을 했다하더라도 제도권정당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인물중에서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엘리트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산업분야에서는 상당수 구 엘리트들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살아남고 있습니다.

<동독과 북한 주민이 서독과 남한 체제를 받아들이는 이유>

박영호 박사는 우리의 체제를 북한사람들이 바라는가 또는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세뇌당했습니다. 계급의 적이 존재하며,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저는 서방, 즉 서독에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며칠 만에 정확히 말해 15일 만에 동독에서 배운 것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민주적인 체제로서 자유가 존재하며,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독에 돌

아가 동독체제에 익숙해지는 데 여러 주일이 걸렸습니다. 동독의 나의 친구들은 나를 눈먼사람으로 취급했지만, 나는 만약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800명의 북한이탈자를 잘 연구해보십시오. 이 800명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이, 언제가 판문점이 열리고 2,000만의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가능해 질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주민이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북한의 선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북한 주민이 완전히 차폐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차단이 그토록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독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서독의 자매기관과 접촉했으며, 교회 간에도 밀접한 접촉이 있었으며, 서독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동독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동독주민이 서독정당을 받아 들이게 된 이유>

박영호 박사는 많은 정당이 출현했던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독 체제를 원하는자는 이 체제 뿐만 아니라, 이 체제를 형성했던 서독정당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들 만이 이 체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공산당으로부터 분당한 소그룹(벨케)에 표를 던질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 정당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은 또한 번의 실험(제3의 길)을 강령으로 내세웠지만, 주민들은 이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녹색당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 매우 적었습니다. 녹색당은 몇 개의 주의 회의에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동독의 연방주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주의회에서도 5퍼센

트 조항 때문에 곧바로 상대화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주의회에 존재합니다.

<구 동독의 군대, 슈타지, 경찰의 거세에 관한 문제>

이권우 박사의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군대, 슈타지, 경찰이 거세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슈타지 경력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 서명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슈타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가옥 슈타지 문서보관소가 그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알려줍니다. 군대출신은 의회에 전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군인출신에 대해서 매우 거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 군대가 구체제에 대해서 매우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구 동독군 출신 장교들이 서독의 연방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교들, 나아가 한 두명의 장군이 연방군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변신을 뜻합니다. 동독의 민족인민군은 해체되었지만, 이제 적의 군대에 통합되어 적의 명령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서독 민주주의의가 어떻게 동독에 그토록 쉽게 이식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여 40년에 걸치는 서독의 민주주의가 동독에 이식될 수 있었는가하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동독 통치하에서 동독주민은 항상 제한적이었지만 민주주의를 경험해왔습니다. 선거를 하기는 했지만, 민족인민전선에서 제시한 입후보자명부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거나 또는 아니면 기권을 해야 했습니다. 기권이 가장 중대한 (구 동독 정권에 대한) 항의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로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동독공산당이 아니라 민족인민전선이 입후보자명부를 제시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독공산당이 직접 입후보자명부를 제시하게 되면, 주민들은 동독공산당과 함께 (동독) 기민당(CDU), 독일자유민주당(LDPD), 독일 민족민주당(NDPD) 중에서 골라서 투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독공산당은 민족인민전선을 통해서 입후보자 명부를 제시했는데, 동독공산당이 거의 대부분의 입후보자를 차지하고, 한두명의 기민당, 한두명의 농민당(DBP), 한 두명의 민족민주당(NDPD), 한 두명의 기타 정당의 입후보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유권자는 이 전체명부에 대한 찬반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입후보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1989년 5월 지방자치 조직인 게마인테 (한국의 동 정도에 해당) 의회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민족인민전선이 입후보자명부에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독일 주요 정당의 현황>

현재 거의 모든 대정당들이 의도적으로 건설적인 중도노선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새 강령도 새로운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고, 기민당도 한편으로 중도노선을 재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몇몇 정치가들은 보다 우파적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의 강령은 8년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독일정당의 강령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지만, 최근의 사민당 정당대회는 새 강령을 채택하여 동독주민의 경험들을 반영했습니다. 통일이 후에 독일은 전연방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세 개의 정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독의 녹색당계열의 90년대동맹, 동독의 민

주사회당(PDS), 그리고 바이에른 주의 기독교사회연합(CSU)입니다. 좌파계열인 민주사회당 때문에 역시 좌파계열인 녹색당은 동독지역에서 거의 표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민주사회당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당은 구 동독에 대한 특히 과거 공산당원들의 향수를 통일독일 내에서 대표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관심이나 정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지지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 지지자들이 나이들고 자연스럽게 되면 이 정당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브란덴부르크 지방자치 선거에서 우리의 경험을 말해보겠습니다. 5년전에 비해 민사당(PDS)은 훨씬 적은 입후보자만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민사당보다 훨씬 많은 입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원수에 있어서 사민당은 민사당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 사민당의 당원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사민당은 절대수에 있어서 더 많은 입후보자를 내었습니다. 게마인데 대의제 기관에서 더 많은 입후보자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 비해서도 많은 입후보자를 내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사민당에 비해 민사당 입후보자는 수자가 적었으며, 그 수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일후 남북한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소수, 즉 북한주민의 이익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하거나 비토권을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인데, 박형중 박사가 제안한 통일의 3단계 모델도 그에 속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방식도 토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식) 연방제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연방의회를 두거나, 또는 양원제를 두어 상원에서 북한측 주민의 거부권을 인정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일 더 자세히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독의 동독 식민화에 대한 문제>

동독주민의 서독 식민화에 대한 반감이 있었으며, 또한 서독인들의 식민화정책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독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 동독지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탈꾼, 행운을 잡고자 오는 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싼값에 토지와 기업을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그중에는 성공한자도 있습니다. 잘난 서독놈(besser Wessis) 등, 동·서독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많은 유모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일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크게 잘못된 정책결정도 있었습니다. 동독시절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는 어떤 토지에 주말농장을 지으면서, 토지임차 관계를 맺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로 사용권 허락을 받았는데, 그 토지는 서독인의 것이었고, 통일 이후 즉각적으로 서독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사용권은 박탈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용권 박탈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토지를 상실했습니다. 그 위에 지어진 집은 이들의 것이었지만, 이들은 대지 사용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먼저 재산을 현물로 소유자에게 돌려 준 다음에 보상한다는 원칙은 40~50년 동안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엄청난 재산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여러 해 동안 동독의 건설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소유권 관계가 해명이 되어야 무슨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환 후 보상이라

는 원칙이 동·서독 간의 관계에 상당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동·서독 통합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동독이 구조조정되었습니다. 동독의 모든 것들이 자세히 검토되었으며, 예를 들어 동독의 모든 연구기관이, 서독에서는 전례없는 방식으로 구조조정되었습니다. 또는 서독의 기업 또는 거대기업이 동독의 기업을 사들인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 기업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자청소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을 싼 값으로 사들여, 공장가동을 멈추게 하면, 경쟁기업은 없어지는 대신에 서독의 공장설비는 완전가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막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동독 소유재산의 80 퍼센트가 서독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동독의 토지소유권, 주식소유권, 건물소유권, 특허권 등이 서독측에 넘어갔습니다.

제 3 회의

- 주 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행정체제 구축방안
- 발 제: 김학성 박사(민족통일연구원)
- 토론자: 최진욱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양현모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박사(지방행정연구원)
김국신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서재진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심익섭 교수(동국대학교)
Herr Steffen Reiche
(브란덴부르크 주 장관)
Herr Karl-Ludwig Böttcher
(브란덴부르크주 시험의회 사무총장)

통일이전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과 통일이후 효율적 지방행정통합의 실현 방안: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학 성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된다면, 현실적 시각에서 지방행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남한의 모델이 북한에 이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이를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지방행정 통합을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1차적 목표는 가장 짧은 시간내 북한지역에 남한과 동일한 지방행정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한제도의 북한 이식이 성공적인 통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상이한 문화체제로 인하여 상당기간 혼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에 충분한 준비 및 기획이 요구됩니다. 만약 통일과정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자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간 자매결연의 성사에는 매우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남북한 중앙정부간 대화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의 경제자립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 아래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장차 남북 지자체간 교류를 대비하여 내륙 도시간 자매결연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동독이 서독도시들의 자매결연 요청에 응한 배경에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문제, 대서독 평화공세 등의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동독의 보다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특히 자매결연 체결과정 및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동독측이 서독측에 요구한 것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실제로 동독측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당국은 독일정책에 대한 정보결여 등으로 연방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형태를 띠기도 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노정되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말해주십시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일단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침 마련 및 진행상황에 대한 조율·협조체제 형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연관지워, 독일과 같이 도시(지자체)당국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간 자매결연에 따른 동·서독 교류·협력 사업들 중 가장 잘된 것과 가장 못된 것을 몇 가지 나열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교류, 체육교류, 청소년교류, 문화적 교류, 평화문제관련 세미나 등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 주십시오.

예상치 않았던 통일이 실현된 이후 구동독지역 지방행정체제의 재건과정에서 도시간 자매결연이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동독지역 행정재건과정에 행정협조(Verwaltungshilfe)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대개 파트너 주에서 파견(예: 작센지역에는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그, 브란덴부르그에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신 연방주의 행정재건과정에서 도시간 자매결연의 구체적·실질적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가능하다면, 통일전 도시간 자매결연을 기반으로 구동독 행정재건과정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를 들어 행정구조재편 진행과정을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통일직후 서독 공무원의 구동독파견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서독 측 자매결연도시의 공무원을 구동독도시에 파견시, 파견기준은 무엇이었습니다까? 단순히 자발적 의사에 따랐는지, 자발성을 부추기기 위해 어떠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는지, 또 이에 대해 파견대상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파견일 경우 여러 부처의 전문 관료들이 고루 파견되었어야 할 것인 바, 각 부처간의 갈등 또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주로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가장 많이 파견되어야 했던 실무분야는 재정 및 법무였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분야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까?

독일의 경우, 통일직후부터 구동독지역의 행정은 서독에서 파견된 고위직에 의해 서독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점차 중간 및 하급 행정관료들이 교체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구동독지역 행정공무원들은 크게 구서독 공무원, 과거 공무원이 아니었던 구서독출신자, 구동독 공무원, 새로 충원된 구동독주민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구동독출신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에도 아직까지 구동독 지역행정조직이 문화적으로는 새로운 체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구체제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구동독 지역의 행정업무 및 직장생활에서 서독출신공무원과 동독출신공무원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이며, 갈등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북한 관계는 과거 동·서독관계와 다른 상황이며,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실정은 구동독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합니다. 따라서 통일이후 행정통합 시나리오들 중, 통합과정의 예상되는 엄청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2년에서 3년정도)동안 북한지역에 자치권을 유보하고, 이 기간동안 북한지역 행정체계의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말해주십시오.

한 부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연방차원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전후하여 연방총리실의 조직적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통일 대비를 담당했던 실·국(예: 독일정책 실무보좌 등) 및 통합과 통일과정을 위한 실·국(예: 신연방주의 내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연방내무성은 통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예컨대 통일 조약을 다른 장관(예: 내독성 장관)이 아닌 쇼이블레 내무장관이 서명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방·주 조직정비처, 지자체 인력

알선 기구, 신연방주 재건단, 지자체 정보소개기구 등의 임무, 성과, 실수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구동독의 동쪽 국경 수비대에 얼마나 많은 수의 서독연방 경찰이 파견되었으며, 이 중에서 특히 관리급 경찰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통일을 전후한 시기 신연방주에서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했으며, 또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있었습니까?

통일과정에서 내무성직원의 외부 파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의 수자(구동독 관료 또는 협력자 포함), 구동독 내무성의 자리이동, 연방내독성의 외부파견 등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동독 내무성의 통합과 관련한 특기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주차원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전 동독에는 약 2백25만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현재 신연방주의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얼마나 많은 공무원 및 공공분야 직원이 증가했습니까? 이들은 별도의 직업훈련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훈련기관, 기간 등 어떠했습니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구신연방 공무원의 충원 비율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통일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과 주민신분증(개인신분증, 운전면허, 여권 등)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특히 업무담당기관, 구동독 증명서의 유효기간 인정여부, 비용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기초단체차원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연방주의 현재 기초자치 행정체제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서독행정체제는 남독식 또는 북독식 등 다양한 데 신연방주는 어느 것을 따랐습니까? 통일이후 신연방의 기초단체 조직체계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신연방주의 지역구분 개혁은 종결되었습니까? 게마인데와 크라이스틀의 재구분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수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데 가능하면, 구체적 통계수치를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연방 기초단체의 지역구분개혁에서 내무성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기초단체 차원에서 개인신분증, 면허증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신연방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과 관련한 정치교육은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행정, 시민대학, 미디어, 신문, 학교 등을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최진욱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지방자치와 북한지역에 강력한 지역정당의 출현 가능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행정통합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이후에는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에 입각한 정치체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통일이후에는 북한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나 국민통합의 실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과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즉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입각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될 때, 지방정치가 지역적으로 기반을 둔 정치세력에 의해서 독점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통

일한국에서 북한지역에 조선노동당 후신의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고 이 정당이 북한지역의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독점하는 경우, 지방분권화가 국민의 화합 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면,

첫째, 지역정당의 출현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전면적 지방자치를 가정할 때, 지역정당의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데, 자치와 중앙통제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으로는 동독지역에 서독출신관리들의 진출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정당체제가 동독지역에 그대로 이식되어 기민당과 사민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였으며, 또한 주지사나 군수가 지방의회에서 선출됨으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지명한다면 서독출신의 주지사, 군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서독의 정당이 동독지역의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서독출신의 지방정부장악으로 결국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공산당후신인 사민당(SPD)이 현재 20%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동독지역의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모든 주지사와 군수는 동독지역 출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베트남출신의 남부지역 장악이 너무 심해서 사회갈등이 심했습니다. 즉 서독지역의 동독지역 독점이나 동독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출현 모두 바람직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당내 민주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즉 기민당이나 사민당의 지도부에 동독지역 출신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주지사, 군수, 주의회, 군의회의 동·서독출

신 비율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독일통일후 서독지역에서의 행정개혁과정과 북한 행정하에 활용가능성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후의 행정통합은 단지 남한의 행정제도를 북한에 이식시키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는 행정개혁문제가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통일을 계기로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에 어떠한 행정개편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통일후 남한의 행정체계가 북한 지역에 이식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급작스럽게 전면적으로 이식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체계가 갑자기 붕괴할 경우, 남한 행정체계의 전면적 이식을 선별적으로 연기하고 당분간 북한 행정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북한 행정체계의 골격을 유지한 채, 고위직만을 남한측 인사로 대체하고 각급 조직에 고문단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행정체계가 동독지역에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 동독행정체계를 활용한 예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끝으로 통일이후 북한지도부의 처리문제와 행정구역 등과 관련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통일과정에서 구동독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실직하였으며, 재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 통일전 동독의 공무원은 약 230만명으로 전체인구 1,640만명의 14%정도이었으나, 현재 동독지역의 공무원은 약 110만명입니다. 이중 약 30%가 구동독출신, 55%가 통일후 고용된 동독출신, 15%가 서독출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구동독 공무원 230만명중 33만명(15%)만이 통일후에도 계속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제기하자면,

첫째, 분야별로 볼 때, 특히 많이 실직한 분야와 비교적 많이 남을 수 있었던 분야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직급별로 볼 때 상위직이 하위직보다 많이 해고되었는데 직급별 동·서독인들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셋째, 경찰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남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동독의 경찰조직은 어떻게 관리되었습니까? 한국의 경우도 북한의 경찰조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행정통합과정에서 행정관리 뿐만 아니라 당일꾼들의 처리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행정일꾼보다 당일꾼의 수가 더 많고 당일꾼들이 행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일을 하며 행정일꾼들은 단지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경우 경우 행정관료와 당관료의 처리 기준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특히 동독행정관료와 당관료의 실직률 차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독일의 경우 행정체제 구축과정에서 주(Länder) 단위는 새로이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쉬웠으나, 군(Krei) 단위 이하가 더욱 어려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한 행정체계가 매우 유사하여, 도가 9개씩 있으며, 행정계층도 3단계로 같습니다. 즉 시·군·구와 그 밑에 읍·면·동도 같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통일이후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북한의 행정구역 유지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조언을 해주십시오.

<토 론>

최진욱 박사: 통일이후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 형태와 교류실태에 대해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특히, 통일이후 행정분야에서 자매도시간 협력의 형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Böttcher: 양독의 도시간 자매결연관계 문제는 과대평가 되었습니다. 통일 당시 동독정치가들은 양독도시간 자매결연문제를 기본조약체결의 정치적 수단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진정한 도시간 자매결연형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독시민들은 도시간 자매결연이 되는지조차 몰랐으며, 전환후에야 그러한 자매결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도시간 자매결연은 정치가간의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간 자매결연 문제는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이 판장했습니다. 동독 지방도시주민의 자발적 자매결연 활동은 통합이전 없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주요 관련자는 SED 당중앙위 파견자였습니다. 그러나 SED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정당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내용도 몰랐고,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 도시간 자매결연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호·접촉·청소년 교육 및 응급환자 치료활동 등을 위해 서독지역 자매 도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치적 활동을 통해 구호·지원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가령, 칼스루에와 포츠담의 경우 포츠담지역에로의 여행하려는 자에게 교회는 개별 민박을 주선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숙식, 자문, 안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Reiche: 통일과정과 이후에 도시간 자매결연의 역할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포츠담사람들은 자매도시인 본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쳐씨가 말했듯이, 장벽 붕괴이전에는 자매결연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할이 있었다면, 교회간의 자매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벽이 무너지고, 무엇인가 관계를 맺고자 했을 때, 포츠담-본, 자르브뤼켄-코트부스, 하일브론-프랑크푸르트 등 기존의 자매결연이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이들 도시간 접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서독의 도시들은 곧바로 동독의 자매결연 도시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은 포츠담에 병원차, 컴퓨터를 공급했고, 양 도시간 청소년 상호교환을 추진했으며, 의료·보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이전에 도시간 자매결연 관계는 거의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했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서독도시들은 동독의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교회간 그리고 게마인데 (읍 또는 동에 해당) 사이의 자매결연이었습니다. 이 자매결연은 동독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통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슈타지 요원 몇 명이 침투하기는 했습니다. 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자매결연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칼스루에와 포츠담간에 우연한 계기로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칼스루에 주민 몇 명이 포츠담에 여행을 갔을 때, 이들은 호텔이 아닌 가정집에서 묵었습니다. 포츠담 바벨스베르크 교회의 몇 가정은 5~6명의 어른 또는 청소년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이들 동·서독 주민들은 저녁에 같이 앉아 서로 대화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15명의 칼스루에 청소년들이 우리와 같이 했으며, 우리측 젊은이들은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정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나는 상당히 많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서독청소년들에게 동독의 역사, 사민당의 역사에 대한 책을 보내주도록 요청했으며, 여기서 자극을 받아 나는 나중에 무엇인가 변화시키고자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조약 이전인 10월 3일까지는 모든 것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 동·서독은 서로 독립국가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통일조약 체결이전까지의 시기동안 행정원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하여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0월 3일 이후에는 주, 도시, 군들 사이에 공식적인 협력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0년 5월 이후에는 동독에도 정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의 파트너 도시들은 새로 등장한 동독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리잡기 이전에는 협력체제를 기꺼이 구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SED 출신의 구 시장을 돕고자하지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 이후에는 기꺼이 돕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매우 잘 준비된 원조가 시작되어 사법문제, 기본적 법령 정비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고 이 자발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원조는 매우 질서있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독 파견관리의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체계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서독출신 관리는 서독에서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동독측의 판사 또는 행정요원은 최고 서독파견자의 보수의 80%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85%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 처음에는 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독파견자는 이밖에도 원격지 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양현모 박사: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원했습니까? 특히, 서독출신이 통일후 동독 행정체제에서 어떤 직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또 기존 동독 출신 당간부에 대한 처리문제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Böttcher: 연방주의회와 행정부의 인적 구성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환이후 동독지역 행정부 인적구성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수상청은 동독담당장관을 동독지역 출신으로 임명했고, 후임에도 계속 동독지역 출신으로 임명한 경험은 주목할만합니다. 동독지역 책임자의 역할은 책임자 개인적 능력과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반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신탁청의 인적 배치, 동기부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자발적 요소를 배제하고 너무 물질적인 요소만을 고려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기는 했습니다. 동독지역 통합후 곳곳에서 도시재건을 위한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의 불발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과 전문가들이 필요하였으며, 여기에 동독 출신 전문가들, 즉 폭탄제거 전문가, 소방수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분야 이외에는 과거 동독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Reiche: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자면, 사법분야에서 전문요원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하룻밤만에 그리고 폭포처럼 엄청난 새로운 법령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점진적으로 함께 발전해온 서독의 법령과 행정의 한꺼번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문제

는 단지 역사가 길다고 해서 구동독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서독법령은 너무도 많은 면에서 자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의 완제품의 서독 법규, 법자료, 그리고 통일조약에 특별히 규정된 법규, 아직도 일부에서 유효했던 동독 법규 등의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사법분야 전문요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재정 부문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토론주제는 지방자치 분야인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사법제도는 별로 관련이 없고, 재정에 관련해서도 고도로 복잡한 업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이라면, 오히려 건축물 관리 등의 분야가 더 중요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했던 이유는, 통일과 함께 동독에 건축경기가 활기를 띠었기 때문입니다. 통일과정에서 콜 수상이 했던 말은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콜은 몇 년내에 동독지역을 장미꽃이 만발하는 정원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일을 전후하여 동독지역 고위직책이 서독사람에 의해서 차지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는 주 행정차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차원이 내려갈수록 구조가 달라지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직책을 동독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고향인 포츠담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우리는 1만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5명의 부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이렇게 작은 마을에 많은 수의 분야별 부시장을 두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다섯명의 부시장직은 동독출신들에 의해 전부 차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이전 우리 시의 시청에는 분야별로 책임을 맡고 있는 5명이 평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

치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 동독에는 엄격한 의미의 (평생직)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후에도 동독지역에 이러한 (평생직) 공무원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일 후에도 5명의 직책은 존재했고, 당시 동독의 노동법은 계속 유효했습니다. 나는 노동권 판사였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5명의 구 동독 관료들이 법적 경로를 통해서 통일이후에도 자신이 직책을 보전하려는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일 직후에 그 5개의 관직을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내 짐작은 맞아 떨어져 그들은 계속 직책을 유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새로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책이 정치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구 관료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구 동독 행정체제의 유산에 관하여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행정규모가 클수록 구 동독의 유산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도시 또는 군단위 행정에서 비율로 따져보면, 구 동독 시절의 관료들이 많고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차원에서는 거의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많은 서독출신들이 고위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동독주민이 서독주민보다 더 유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싶지는 않지만, 동독출신들은 그 동안에 많이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국장급은 가장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인데,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모든 부처를 통털어서 동독출신 국장은 3명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정부에는 10개정도의 부처가 있고, 각 부처마다 5개정도의 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균 10% 정도만이 동독출신입니다. 나는 언젠가 월급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도 구조조정되었는데, 새로운 교수, 연구기관장들은 서독사람으로 충원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점차로 정상화되어가고 있긴 합니다. 지난 8년간 동독주민 또는 전문인력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어, 점차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편에서 바이언, 바덴뷔르템부르크와 같은 서독 연방주와 튀링겐, 메클렌부르크 폼메른 신연방주 간의 수준이 서로 동등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후 8~9년이 지난 지금 동·서독 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부영 박사: 남북한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지방자치 허용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서독 행정 요원의 동독이 주의 개인적 동기는 무엇인지, 또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합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iche: 발제에서 제기된 질문들 중에서 통일후 북한사람들에게 지방자치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또는 가급적 참여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견해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동·서독간의 충돌은 서독인들이 마치 점령자 또는 식민자인 것처럼 행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40년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태도가 갈등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독 사람들이 물을 어떤 식으로 끓이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2년만에 그것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북한을 살펴서 어디에 한국의 파트너가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8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을 가르쳐서, 북한을 접수할 때 지도적 임

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접수할 때, 쓸데없는 마찰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북한사람은 남한주민들과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 후 행정통합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 탈북주민을 참가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원장께서는 행정통합 계획이 단순하게 남한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남북의 공동작품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독 행정요원의 동독지역 진출 동기와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개인적 출세 문제가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독에서 동독에 온 사람들 중에서 거의 80~90%가 서독보다 등급이 높은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실장은 국장이 되었고, 서기관은 실장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실장, 국장, 차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밖에도 매우 고매한 동기도 있었습니다. 서독의 많은 사람들은 동독에서 명예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서독의 퇴직자들이 한 두 달의 짧은 기간에 걸쳐, 또는 서너달 내지 반년 이상의 더 오랜 기간동안 동독에 머물면서 많은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동독출신이 설립한 사기업에는 서독출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동독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동독기업이 매각된 경우도 많았는데, 동독 사람들은 그것을 매입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이 동독기업을 매입하여 서독출신 경영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신탁청이었습니다. 신탁청에

는 많은 구서독 경영자들이 참여했고 구서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경제를 3~4년만에 사유화하는 일은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사유화는 대체로 잘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도 많은 실수가 저질러졌습니다. 구동독 기업들이 너무 싼값으로 매각되거나, 잘못 팔린 경우도 있었는데, 심지어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잘못 팔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예를 들면, 구동독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어떤 베어링공장이 있었는데, 서독의 큰 공장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공장을 사들인 다음, 공장을 폐쇄시켜 8,000명의 실업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나시의 광학공장 경우도 유사합니다. 신탁청은 이 공장의 처리를 구서독 정치가에게 맡겼는데, 그는 이 공장을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30~40억 마르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돈을 서독의 기업가를 에어푸르트와 예나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용했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예나시의 광학공장을 서독기업가에 팔아넘겼습니다. 서독기업가는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부지를 팔아넘겼고, 거기에 마이크로칩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그 주식은 곧바로 액면가의 25%나 값이 올라 결국 서독 기업가를 살찌우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최진욱 박사: 행정자치부 통합시 문제점에 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독지역의 행정가에 대한 선출 과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Böttcher: 남북한의 경우, 통합후 권력분산과 이행을 위해서도 지역분권적인 지방자치체제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한 분권 및 권력이양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통합

을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한의 지역 단체장선거에서 정당프로그램보다 지역 갈등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와는 달리 독일의 경우 지방행정구조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한에 좋은 제도를 정착시켜, 향후 북한에 시험할 기초를 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통합 후 북한지역의 이권을 대변할 자치제도 도입 주장을 극복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통합후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전담기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대립과 갈등관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은 정치적 괴리작용이 일어난 사회에서 단순히 북한의 과거를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제도·장치를 도입하기보다 성숙한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교육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Reiche: 주의회에는 서독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의회에는 약 5%에 달하는 3~5명 정도의 서독출신이 있습니다. 군의회에는 서독출신이 더 적으며, 거의 대부분이 동독출신입니다. 물론 서독출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좋은 현상으로 환영할 만합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가 증가했고, 서독 또는 남독에서 브란덴부르크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이 들을 받아들여 군의회 선거에 입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 또는 시장으로 서독출신이 선출되는 경우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지역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동장연합회 의장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여러 이유로 다시 그 직책에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동장연합회 의장 직책 수행 중 자기 기업에 특혜를 주

였거나 하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서독출신으로서 재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동장연합회 의장으로 추천되어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시장 입후보자로 선출될 것이 분명한데, 시민당 뿐 아니라 시민운동도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후 5~6년이 지난 다음에는 동독출신이나 서독출신이나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능력과 자질이 어떤가가 더욱 중요한 실정입니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서독에서 브란덴부르크로 이주해서 5~6년 동안 살게된 사람은, 브란덴부르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동독출신 또는 서독출신이 되느냐의 문제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토론했습니다. 특히 주지사 선거에 서독출신 또는 동독출신 누구를 내세우는 것이 유리한가를 토론했습니다. 작센주에서는 서독출신을 내세웠습니다. 작센주는 비텐코프라는 서독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를 입후자를 내세워 선거에서 압승했고, 또한 매우 훌륭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튀링겐에서는 애초에는 동독출신을 내세웠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 선거에서는 에버트 재단 이사장이었고 과거 라인란드-팔츠 주지사였던 포겔씨를 내세웠습니다. 튀링겐에서는 앞으로도 서독출신이 주지사를 할 것 같은데, 내무장관이 서독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다 동독출신이 주지사를 했습니다.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최초에는 운이 좋아서 서독출신이 주지사를 한 경우가 있지만, 그는 물러났습니다. 시장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독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장은 서독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찌히시의 루베씨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장은 동독출신인데, 그

는 유감스럽게도 사회민주당 계열이 아니라, 기민당 계열에 속하는 자입니다. 시장의 경우에는 출신지역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선출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김국신 박사: 통합후 서독 행정체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진 박사: 특히 구 동독 경찰조직 구조조정 문제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치안 및 기타 민생범죄 발생유형과 대처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익섭 교수: 서독은 이미 1975년에 24,000여개의 기초단체조직을 8,000여개로 줄이는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당시 7,500개였습니다. 인구수가 서독에 비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비대한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서독은 통합후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양쪽 지역에서의 선거를 통해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Reiche: 이번 질문은 이 세미나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서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은 멈췄고, 이것이 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연방 총리 콜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가 재선된 이유는, 그가 독일인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선거전략에 이용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는 지방 뿐 아니라 전연방적 차원에서 서독의 체제를 개혁하는 데 힘과 정열을 쏟기 보다는 그것을 잠시 미루고 우선 통일문제에 집중하자고 주장했고, 이는 대다수 동독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독의 개혁은 의식적으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서독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매우 소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시행되었는데, 이 것들은 주민 다수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병에 의한 결근일 수 축소와 결근일 임금삭감, 70~65% 수준으로 연금축소, 재산세 폐지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자에 대한 여러 형태의 조세 삭감조치가 통일후에 있었는데, 동독에 투자하는 자는 여러 해에 걸쳐서 세금감면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함부르크의 한 백만장자는 극빈자 사회보조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엉뚱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통일될 경우, 6,000만의 주민이 당면하게 될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000만의 경우에는 지금과는 다른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은 8,000만의 인구에 16개의 연방주가 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주의 수를 10~11개로 줄이게 되면,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경쟁력이 한층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6,000만에 18개의 도가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통일후에는 북한 지역의 도의 개수를 6개 또는 5~4개로 줄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6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한지역 도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0~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통일과정이 민족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면, 통일은 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위하여 국민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한다면, 한국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그러한 노력은 1998년 또는 1999년에야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가을에야 정권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16년 동안 집권한 콜과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16년이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한 사례로써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간의 통합을 들 수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동·서독 분단시절에 많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동베를린은 동독으로부터, 서베를린은 서독으로부터 각각 특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통일후 엄청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베를린과의 통합에 대해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은 통합시 재정적자를 떠맡아야 한다는 데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 등의 책임있는 공직자들도 주민들을 직접 현장에서 설득하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통일후 일정기간 동안 동독의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된 곳도 있습니다. 군 단위의 행정구조는 구동독의 것이 93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구조는 93년에야 바뀌었지만, 업무구조는 그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에서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실수라고 한다면, 전체구조의 변화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점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것이고, 새 헌법에 따라 연방의 구조가 바뀔 것이며, 일어난 후에는 새로운 지방구조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

저 헌법을 바꾸고 그에 따라 연방구조를 바꾸고, 다른 것은 나중에 처리하자고 말한다면, 실제로 바꾸어야 할 때, 사람들은 이미 너무 지쳐버려, 개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간 계획을 제시하면서, 언제 무엇이 시행된다고 미리 말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에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단위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느냐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 적절한 격언이 있는데, “정치는 역사의 딸이며, 역사는 지리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포츠담 대학에는 베르너 얀이라는 매우 유능한 행정학 교수가 있는데 심익섭 교수께서는 그분의 주장을 참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경찰에 관한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구동독 행정분야에서 경찰의 숫자가 너무 많았었지만, 실제로 거리에서 일하는 교통경찰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경찰내부에서 심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경찰은 엄청난 규모의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담당 경찰은 거리로 내보내어 교통과 치안을 담당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리를 푸르게 만들자”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독일경찰제복은 녹색-번역자)

동독시절, 슈타지와 일반경찰은 엄격히 분리되었습니다. 슈타지는 통일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슈타지까지 경찰로 포함하여 본다면, 통일후 경찰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의 역할도 통일후 많이 변했습니다. 동독시절에는 경찰에 대한 큰 기대가 필요치 않았으며, 또 치안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억압적이었던 동독의 질서체계에서는 치안은 염려될 게 없었던 것은 자명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국가에서 시민은 치안강화, 더 많은 경찰, 범죄 조직범죄 강력한 단속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란덴부르크주와 같은 교통의 요지에서는 경찰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과 함께 전혀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통일범죄입니다. 한국통일의 경우에도 이점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통일시에도 통화교환이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수십억의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원의 컴퓨터 칩 또는 사무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물건이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장부에는 계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1:1 또는 2:1 또는 3:1로 동독마르크를 서독마르크로 계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동독 기업의 재산을 서독식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북한의 기업은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통일 이후 이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엄청난 규모의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자산의 재평가는 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인데, 신뢰할만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기업은 사기꾼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재평가할 때 북한 기업의 실제자산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북한의 통일이 조만간 이루어진다면, 에버트재단 주최로 독일의 통일범죄국과 각 정당들과 함께 한국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여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신문은 연방의회 부속 통일범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과거 동독 국유재산 중에서 100억마르크가 분실되었으며, 그 중에서 37억마르크만을 되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통일과정에서 수십억 마르크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사적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재산을 가로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공산당 당료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자금을 스위스로 빼돌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독사람들도 아마 거의 같은 규모의 재산을 빼돌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들은 통일이 되자마자 구 동독관료와의 연계를 통해서 핵심적 사안에 접근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구동독 국가 및 공공재산의 불법적 사유화와 관련하여 첨부할 말은 공산주의 국가의 장부계산방식이 자본주의 형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사람만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일반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은 그 특정 항목의 재산을 곧바로 자기의 사유재산인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일직전 많은 토지가 저평가되어 팔렸습니다. 평가서가 있기도 했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동독 마르크로 대금이 지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를 사들인 사람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고위 경영자들은 한국사람만큼이나 똑똑하고 노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40~50년에 걸쳐 외부의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접촉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위경영자를 비롯한 북한의 고위층은 언젠가 북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위협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나름대로 내부붕괴를 통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고위공직자들은 내부붕괴가 어차피 불가피하며, 매우 혼란스럽고 재앙적인 상황속에서 한국에 의해서 구제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북한고위층은 북한 붕괴 그 자체를 결사 반대하기 보다는 붕괴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가능한 많

이 확보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Böttcher: 통합후 이루어진 서독지역의 행정개편은 동·서독 통합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행정개편이 이루어 졌으나 통합과는 별개로 추진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도 통일을 대비하여 행정자치 기구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행정기구를 통합하는데 있어 광역 뿐만 아니라 기초 단체장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지역 사람들도 포함하는 행정개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남한내 지방자치 개혁을 사전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독지역의 경우, 행정개혁은 1990년에 감행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차원의 개혁은 통합직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북한엘리트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최상부 엘리트들은 모두 개편되어야 하고 나머지 중간 계층 엘리트들은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 재충원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합니다. 당간부 처리와 관련해서 특수 당간부는 일괄 처리되어야 하며, 중간·하위 당간부들만 선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Reiche: 가능하면 공무원을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가능한 개인별로 검토를 해서, 북한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구동독 행정구조는 상당한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동독정부는 해체되었고, 베찌르크(Bezirk: 역자주 - 동독시대의 행정단위로 한국의 도단위와 유사)의 정부도 해체되었으며, 시·군·읍단위의 구조는 심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지역의 44

개군과 도시는 통일후 18개의 군과 도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1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수자의 행정요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주차원에서는 아직도 감축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구동독지역 공무원은 서독의 85%의 월급만을 받고 있지만, 행정요원수가 현재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서독에 비해 한층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서독보다 작은 데, 그 이유는 신연방주 예산에는 서독보다 2배나 많은 양의 정부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차원보다는 주차원에서 한층 더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행정인력의 감축과 더불어 독일은 통일직후부터 행정요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북한 행정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수행과 병행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경영방식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동독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엄청난 직업창출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을 유지하여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독일에서는 이러한 관행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뿐더러, 누구도 그러한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앙집권적 독재국가는 주나 대규모 군처럼 자생력있는 행정단위를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동독정부는 1952년 실제로 기존의 5개 연방주를 해체하고, 그 대신에 15개의 베찌르크를 설치했습니다. 강력하고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대규모 행정단위 대신에 위로부터 관리하기 쉬운 수많은 소규모 행정단위를 만들어 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14~15개 군 대신에 44개 군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동독 지방행정구조에서 군은 규모가 너

무 작아 자율성이 없었고, 상부기관인 베찌르크의 명령에 의해서만 관리되었습니다. 베찌르크 역시 거의 자율성·책임성을 갖지 못했으며,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만 통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읍이 못하는 것만 군이 하고, 군이 못하는 것만 주가 하는 식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인원감축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주들은 베찌르크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주는 베찌르크는 해체했지만, 주정부 아래 베찌르크 정부를 두었습니다. 작센주의 경우에는 주정부 아래 3개의 베찌르크 정부가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는 그와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 아래 바로 군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량인원감축에 따른 저항이 있었지만, 해고자들은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업자 임금, 실업자 구제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이 때문에 과거보다 생활이 더 향상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항은 비교적 작았습니다. 첨가하면, 기업이 폐쇄된 경우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뷔텐베르크시에서 재봉틀을 계속 생산할 것을 요구했으며, 켐니츠시에서 화학공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일반주민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재봉틀이나 화학사가 생산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대팽창해 있던 행정을 줄이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거리에서 데모를 했다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오전 회의에서 미처 대답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지금 말하겠습니다. 먼저 구동독 신분증명서, 면허증과 관련하여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와 증명을 새로운 국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그 하나였습니다.

통일한국이 탄생할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는 한국사람 모두가 새로운 증명서를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조약에서 그와는 달리 결정했습니다. 독일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독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은 계속 유효하며, 동독의 것들만 바꾸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증명서마다 재발급 과도기 시한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구 동독의 주민등록증은 1~2년, 여권은 가장 길어 5년 동안 유효했고, 운전면허증은 아직도 계속 유효합니다.

최진욱 박사가 발제에서 제기한 첫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현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을 위험 등 때문에 개혁의지가 저하하거나 저항하게 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독일 통일 7~8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통일과 관련해서만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동독지역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역할은 과거와 다릅니다. 구동독지역은 1933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사민당 지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은 1990년 인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보다 거의 두 배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콜총리의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1990년 12월의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콜의 인기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사당은 지난 9년 동안 동독지역에서 지지자를 전혀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민사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계속 민사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선거에 항상 참가하기 때문에, 전체 선거참여율이 낮아지면 민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민사당 지지자들은 일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동독공

산당은 220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일직후에는 23만 정도 즉 동독시절의 10분의 1인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극적인 축소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마을에는 민사당 지지자가 거의 없으나, 구 동독의 행정 중심지에는 상당한 지지자가 있습니다. 포츠담의 경우를 보면, 지역에 따라 지지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신도시 지역의 주거환경이 좋고 과거 당료들이 주로 살았던 곳에서는 민사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비하여, 과거 비당원들이 섞어 살았던 지역에서 민사당에 대한 지지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나 통일후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재발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 실현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설령 현재 어디선가 민사당이 50% 이상을 획득하여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사당의 지지기반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동독공산당원이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아 자연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민사당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는 불가능했을 것이지만, 현재는 거의 50%의 주민이 어떤 정당이 민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그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민당의 목표는 민사당을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4~8년내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0~80년대 유럽의 경험에 대해서 한국사람은 주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공산당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가 개방적일수록 공산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0년의 독일경험, 그 이전의 프랑스, 스페인, 현재의 헝가리에서의 경험은 민주주의가 개시되면 공산주의 세

력은 실질적·내용적으로 급속히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1950년대 탈스탈린화 이후 공산당의 독재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의 경험을 보면, 헝가리에서는 공산당이 질라 혼의 지도하에 다시 집권했지만, 공산당은 경제, 대내, 대외 정책에서 완전히 서방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으며, 정권교체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구서독은 통일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독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 사람들이 원한다면 남한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과거 40년 동안 그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동독사람들이 서독에 오면, 즉각적으로 서독시민으로 인정되고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 등 일반시민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북한사람에게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동독 집권층은 통일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서독의 평균적인 기술자도 에리히 호네커보다 한층 잘살았기 때문입니다. 동독주민들은 동독 국가와 당 고위층이 살던 반드리츠 지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지역의 생활수준이라는 것은 서독의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벽이 무너지던 첫날, 서독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동·서독의 생활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위층의 경우, 이미 일년전부터 동독경제가 거의 붕괴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동독의 파산을 1~2년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도저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독 공산당 고위층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호네커라든지 쿠르트 하거 등의 최고위층을 새로운 정치제도에 통합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기묘한 정치연합이 존재했습니다. 서독의 보수주의자와 동독의 시민운동단체는 슈타지 및 동독고위층을 옹정하는 과정에서 수년간에 걸쳐 구동독사회를 히스테릭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통일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치적으로 히스테릭한 상황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또한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체제에 통합시킬 기회의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건 데, 우리가 침착하고 중심을 잡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새로운 체제에 통합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öttcher씨는 나와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는 데, 그는 경제차원에서는 더 철저하게 숙청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런 일이 통일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인데, 남한의 투기꾼들은 북한의 경제책임자와 곧바로 아주 친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재산이 아니라 국가재산을 관리했던 북한 경제책임자들 중에서 누구는 통합하고 누구는 배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의 철저한 공산주의 기업가는 언제든지 금방 가장 철저한 자본주의 기업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제진 박사: 권력엘리트에 대한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볼 경우, 독일은 무혈혁명의 형태로 통일이 됨으로써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동독엘리트들은 정치적 숙청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남북한의 경우도 무혈 혁명에 의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겠으나, 숙청을 당하게 될 북한측 고위 엘리트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통합의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으로써 이러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통일과정에서 동독엘리트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최종 수용과정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독 엘리트 숙청방법과 정치 재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원장: 한반도의 경우 통일이 닥친다면, 변혁기의 대체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해방후 친일적 세력이 해방이후 미군 점령기 미군정 정책시행의 선봉이 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노이에스포르름이 통합후 및 현재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öttcher: 동독지역의 권력엘리트들에게는 엘리트 숙청이 쇼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분명 북한측 고위 엘리트들에게는 충격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동독출신 엘리트들을 변화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통일을 촉진시키는 일에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북한 통일을 위해 북한도 남한지역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할 것이고, 이때 남한측이 시도하고 있는 햇볕정책도 효과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독은 서독지역에서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서독은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동독지역 사람들은 통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물질적 삶의 조건에서 서독이 좋았기 때문에 통일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동독지역 고위 엘리트들은 통일되기 1년 전 동독경제의 파산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동독엘리트들을 철저히 숙청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권력을 이용하여 통합직후 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철저한 자본·이익가가 될 수 있음이 입증됩니다.

Reiche: 노이에스 포럼은 현재 전혀 정치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조직은 매우 느슨한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직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맹', '민주주의적 돌파', '민주주의를 당장에', 시민당 등과 같이 매우 진지한 시민운동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1989년 9~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베르벨 블라이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신호탄을 울리려고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시도를 개시하려고 했었고, 몇몇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작작업은 어떤 분명한 강령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론을 위한 초대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이에스 포럼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노이에스 포럼은 그 뒤로 월요정기 데모를 지도

하는 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개중에는 선거에 참여하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단순 토론 조직인 원래 노이에스 포룸이 가지고 있던 목표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 선거에 무관심했던 노이에스 포룸은 1990년 가을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러나 과도기 동안 노이에스 포룸이 3~4달 동안 몇 군데서 시장후보를 추천했던 적은 있습니다.

아직 노이에스 포룸은 존재하고 있으나, 노이에스 포룸에 착실하게 참가했던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하던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노이에스 포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 동안 시민당 또는 기민당에 가입했는데, 시민당에 더 많이 가입했습니다. 베르벨 블라이는 콜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동독의 과거역사 연구회와 통일과정에서의 희생자를 위한 재단을 건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기민당의 아데나우어 재단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블라이 개인은 현재 보스니아에 가서 기부금품 분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항상 받고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세뇌와는 다릅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시장이나 행정요원을 교육하는 데 개선할 점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교육 방식이 크게 달라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독정부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형사소추 시한은 연장되었습니다. 통일범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기민당 정부는 정치국원, 또는 국경수비대 요원에 대한 처벌과 같은 별로 쓸모없는 일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동독범죄위원회는 별 소득 없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장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한

희생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대대적인 재판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한 재판 대신에 통일을 이용하여 사적인 부를 축적한자에 대한 색출이 훨씬 더 의미있는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민당 정부의 공과를 종합한다면, 1989년과 1990년 독일인에게는 매우 작고 좁은 통일을 위한 창문이 열려있었을 따름입니다. 통일이 2~3개월 지연되었다면, 독일통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대제국인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4 협상과정에서 붕괴하는 소련의 동의를 얻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콜은 매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콜은 독일 정치가 중에서 이점을 제대로 파악했던 거의 유일한 정치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콜은 그 이후의 통일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경제, 노동시장, 정치 등에서 수많은 결정이 달리 내려져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마감하면서 한국의 친구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독일 국내외 세미나에 참가했는데, 한국에서의 이 세미나는 가장 훌륭한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첫째,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둘째는 이 세미나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논문 및 발제문을 읽어봤는데, 한국측은 독일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왜 한국에 가야하는 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정도였고, 오히려 제가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일내에서 독일 통일과 통일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독일에서 혁명은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변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룩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했던 일이 다른 곳에서도 쓸모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인은 이미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술수준이나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이미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세기를 특징 지우는 동서갈등이 남북한 갈등이라는 기묘한 형태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21세기에 진입하는 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500마리의 소를 뒤쫓아 대우나 현대가 생산한 500대의 자동차가 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폴크스바겐 회사의 '골프'라는 차 약 1,000대가 동독에 진입했을 때, 동독체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500대의 자동차를 뒤쫓아 500명의 한국인이 각각 남북한으로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날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이러한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 저는 민족통일연구원을 노벨 평화상후보로 추천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며, 공자와 같은 여유가 여러분의 앞길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극동에 처음 왔는데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3~5년내에 통일축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경제장관과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리고 통일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의일정

1998. 6. 15(월)

- 09:00~09:10 개회사: 민족통일연구원 원장
09:10~09:20 축 사: 주한 독일 대사
09:20~09:30 인 사: FES 서울소장
09:30~09:45 기조연설: 양성철 의원(국회 통일·외무·통상위원회 간사)

10:00~18:00 제1회의

- 주 제: 동·서독 정당통합과 한반도 통일
- 발 제: Herr Karl-Ludwig Böttcher
(브란덴부르크주 시협의회 사무총장)
손기웅 박사(민족통일연구원)
- 토 론 자: 손기웅 박사(민족통일연구원)
황병덕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서준원 박사(국회법제예산실)
Herr Karl-Ludwig Böttcher
(브란덴부르크주 시협의회 사무총장)
김도태 박사(민족통일연구원)
김영탁 과장(통일부)

1998. 6. 16(화)

09:00~18:00 제2회의

● 주 제: 동·서독의 의회제도 통합과 한반도 통일

● 발 제: 박형중 박사(민족통일연구원)

Herr Steffen Reiche

(브란덴부르크주 과학기술문화부장관)

● 토 론 자: 여인곤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신덕수 교수(통일교육원)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박영호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이권우 조사관

(국회의무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1998. 6. 17(수)

09:00~18:00 제3회의

- 주 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행정체제 구축방안
- 발 제: 김학성 박사(민족통일연구원)
- 토 론 자: 최진욱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양현모 박사(한국행정연구원)
한부영 박사(지방행정연구원)
김국신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서재진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심익섭 교수(동국대)
Herr Steffen Reiche
(브란덴부르크주 과학기술문화부장관)
Herr Karl-Ludwig Böttcher
(브란덴부르크주 시험의회 사무총장)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 외 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정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
전현준
계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육태환
전현준
계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